

##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 4 <권두논문>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후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7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23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48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일관계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55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화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년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라던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봄과,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던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일관계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 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 실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체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잡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

〈권두논문〉

## 동아시아 다자협력 구도의 변화: 중국의 공세와 미국의 후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국제정치에서 다자협약의 구성은 ‘힘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규범과 협력에 의한 평화와 공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관념에 기초해있다. 나아가서, 일국일표주의라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국력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평등주의와 이에 기초한 대등한 대표권을 인정하는 의회주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추고 있다. 다자협약체를 통한 국제질서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공동체 구성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그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아시아에서 다자협약체 구상의 태동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 새로운 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이다. 동아시아에서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다자협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다자협약을 공동의 선을 위한 다자협약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세력대결에 있어서 양국이 다자협약을 외교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멤버십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양자관계의 중복된 협력관계를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동아시아 다자협약체에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중심으로 아시아라는 지리적 정체성에 기초한 폐쇄적 다자협약체를 선호한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이라는 확대된 정체성을 가진 포괄적 다자협약체를 선호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다자주의와 중국의 다자주의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협력의 과정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과 세력의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포함과 협조를 강조하는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를 협력 파트너로 다자주의 멤버십 게임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의 배제와 견제에 중점을 두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를 파트너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구도를 보여 왔던 측면이 있다. 미국이 배제된 형태로 추진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대하여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미국에게 호의적인 나라들이 직접 나서서 역외국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적 역할을 견제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만으로 구성된 경제협약체인(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와 이러한 배타성을 조정하여 회원국의 범위를 확대한 동아시아 경제협약체(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가 대표적인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경쟁구도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다자주의에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바마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주도해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중국은 주도적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ASEAN 10개국에 추가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APEC에서 일대일로(One Road One Belt)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서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의 47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구축하여 미국 중심의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의 다자주의 공세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질서 형성은 물론 국제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대하여 미국에 대한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등을 전제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대중국 다자협력구도를 제안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 제안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G2의 패권경쟁을 위한 회원국의 동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담보하는 경찰국가라는 공감대를 얻어 현재 패권국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AIIB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제시하는 다자주의가 회원국 사이에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며 중국이 “공동이익의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동의

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선별적인 파트너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한국의 선택이 복잡해지는 대목이다.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 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 가. 한미동맹의 효율적인 작동과 한반도 비핵화, 정확히는 북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

## 1. 들어가는 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함
  -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는 정책지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명확함
  - 초기에는 트럼프의 정책지향이 국내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해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추종하는 Hamiltonian의 시각에 부정적인 Jeffersonian의 입장을 취함
  - 당선 이후에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미국 국민의 물리적 안보와 경제적 부응에 중점을 두고 해외에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Jacksonian의 입장을 통해 레이건과 부시 Jr.의 전통적 공화당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임
-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Jacksonian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세계적 경찰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populist적인 대외정책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populism 대통령이었던 Andrew Jackson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이익을 좁은 의미에서 규정하여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역할을 축소할수록 비용과 위협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간주
  - 군사적 개입주의에 반대하고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절약한 자원을 국내 문제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
  -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미국적 사고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것이나 세계의 변혁을 위한 미국만의 유일한 사명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미국 시민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헌신을 더 중요시 함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미국 국민의 물리적  
안보와 경제적 부응에  
중점을 두고 해외에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Jacksonian*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하나의 중국에 대한****비판적 시각,****중국을****불공정한 무역을 하는****국가로 규정,****미국의 보호주의****무역의 확대,****북한의 군사도발에****대한 근본적인 대안의****마련 등이 이를 대변**

-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틀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와 자유무역을 주장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
  - 오바마의 민주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그리고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재균형(Rebalancing)으로 명칭변경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에 대한 아웃소싱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 2015년 중국은 6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5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함
  -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한국과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중국의 값싼 소비재의 수입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을 선포
-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대미 위협외교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
  -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정치 및 군사 안보분야의 협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갈등,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같은 위협요소가 증가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군사 안보의 위기와 경제적 갈등이 동시에 증가
  - 미국 시민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같은 가치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국을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로 규정,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의 확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 등이 이를 대변
-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틀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와 대북한 정책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요인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이 주도한 미국 일방주의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

##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인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러시아 스캔들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동아시아 특히 대중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향
  -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고 폼페오 국장도 육사 출신이며,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 백안관 비서실장으로 있는 존 켈리도 해병대 장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서 군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을 강화하고 공통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미국의 힘과 안보 주권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동맹을 중시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태지역의 동맹을 지지하고 역내 주둔 미군 확대를 주장
  
-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은 전임정부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기본적인 변수는 아니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 추구
  -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철회를 천명했지만—이미 트럼프가 당선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비준요구를 포기한 상태였으나—동남아 국가의 중요성에 따라 TPP에 대해 다시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
  -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정책적 불이익 위에 가능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경제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함
  - 미국 국민의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이미 중국 등지에 공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세계 혜택을 제공
  - 미국의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수입물품에 대한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구
  
-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초기에 중국과 통상 문제에 협상력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경제중심 접근에서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
  - 중국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과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은 전임정부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기본적인 변수는 아니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 추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 과정에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

전통적 동맹유지와 함께 군사비 분담요구를 통해 전임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변화를 예고

-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확장정책에 대해서 미 항모전단을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강경대응이 경제적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에서 적극적인 견제로 전환
-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홍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만에 대한 접근 정책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활용
- 브루킹스연구소의 비상주 선임연구원인 에반스 리비어는 2016년 12월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주최 회의에서 미국은 “미국의 공언을 이행하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국과 호주 등을 참여시키는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의 확대를 추진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 과정에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
  - 취임 초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나 남중국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강경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일관된 양상임
  - 남중국해에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포함하는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주둔시키고 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자동맹에 근거한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견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해 강경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부터 미국은 중국이 분쟁 수역의 섬에서의 건설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간의 대결을 전망하면서 분쟁수역에서 중국의 건설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첫째, 섬에 건설을 중단하고, 둘째, 도서에 대한 접근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한반도의 사드(THAAD) 배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의 출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 표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에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사드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은 대남공격을 억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봉쇄전략의 주축으로 활용
  -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는 한반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효과

- 사드 시스템의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2,000~3,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 노출되는 감시능력을 미국이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확산
  -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군사 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정책의지의 반영으로 해석
-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시행 등 더 강력한 압박카드를 준비
- 중국 2위의 통신장비 기업인 ZTE가 이란 회사 및 정부기업에 수익 달러 통제품목을 수출하고 북한에 283차례 통제품목을 수출했던 것을 문제 삼아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를 통해 고강도의 대북 및 대중 압박을 개시
  -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처벌대상 기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카드가 남아 있음을 예고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도록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자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통적인 Jacksonian의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과 비용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당선 이후 입장 전환
- 한국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던 강경입장에서 선회
  -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던 불개입주의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전임 오바마 정부가 수행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군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의지를 재확인
  - 대통령 후보자였던 트럼프의 입장은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의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활동하는 비용은 상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미국의 국익은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선회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활동하는 비용은**

**상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미국의 국익은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선회**

**북한은****2017년에 들어서****6차례에 걸쳐****미사일 발사실험을****지속하고****6차 핵실험을****수소폭탄 실험의****성공으로 선언하는 등****핵 국가의 입지를****굳히기 위해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고****있음**

-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용인하는 꼴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의사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
  - 그로부터 한 달 후,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는 적극적 의지와 함께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협상을 하겠다고 회의의 형식까지 언급했지만 대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관되지 않은 입장표명이 이어짐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설명 중 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은 10~20% 정도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000년 미국 대선에 처음 출마했던 당시에 북한의 영변 핵원자로에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했던 경력을 소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You’re damned right)”고 대답하면서 강경대응의 가능성을 분명히 함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의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문제도 안보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
  -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이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군대와 경찰역할을 맡을 수 없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군사지출에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미국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방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는 수정이 나타날 것
- 북한은 2017년에 들어서 6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하고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으로 선언하는 등 핵 국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북한은 사거리 1만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형

-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미국을 위협
  - 북한은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사실을 보면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적 진전이 있고 미국본토를 타격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
  -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직전인 5월 6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22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9월 3일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실제로 5.7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북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탄 발사실험을 통해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시도
- 7월 14일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기하며 평가 절하
  - 7월 28일 밤 11시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4일 첫 발사에 성공했던 ‘화성-14형’이라 주장하고 2차 발사 시험도 성공적인 것으로 발표하면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사거리가 1만 Km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부까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 평가
- 북한의 ICBM은 미국에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동아시아의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을 보여줌
-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 주도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주장하면서 7월 28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
  - 군사적 조치의 실질적 사용을 통한 참수작전과 북한의 정권교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북한 정권에 안보확약을 제공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김정은 정권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려는 상충된 시도를 표명
  - 북한의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북 강경 대응론이 나오는 한편, 틸러슨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결을 주장
  - 이와 동시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북한의 ICBM은  
미국에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동아시아의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을 보여줌**

**최근의 사태 전개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고착시키는 경향으로  
진행**

(WSJ)이 2일(현지시간) 전해 강경대응과 대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 기류 확산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핵실험, 스커드 미사일뿐 아니라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통해 사거리를 연장하고, SLBM 실험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미국본토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군사 위협을 제기
  - 북한이 미 본토의 서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위협에 대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2007년 1월 "동북 아지역과 미 서부 해안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힘의 사용이라고 믿는 워싱턴 외교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지역방송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북한은 세계에 위협이다. 북한은 세계의 문제다"면서 "북한은 곧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방송(WCPO)은 보도
  - 2017년 8월에는 북한 전략군이 태평양 광 미군 기지를 화성-12형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는 군사적 위협을 발표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근의 사태 전개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고착시키는 경향으로 진행
  - 북한이 2월과 3월에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등 북한의 모험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북정책을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의심을 보이면서 북한의 위협을 타개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고위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대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커지면 이웃국가들과 군사적 대립의 여파를 우려하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전망
  - 북한의 지난 7월 4일 화성-14형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7~8천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면 미국본토의 서부연안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을 직접 위협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구체적 대안을 직접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백악관의 대북 정책 검토(policy review)에 ‘군사공격(military strike)’ 이 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SJ은 약 2주 전에 캐슬린 F. 맥파랜드 국가안보(NSC) 부보좌관이 국가안보관리들을 소집해 대북 정책을 제안하라고 지시했고,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부터 군사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의 표명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전에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
-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뉴욕 타임스의 분석)
  - 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한 단일의 공격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전시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장치를 사용하므로 사전 공격의 효력은 무력한 반면 북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소용없는 상황
  - 북한의 무기고를 마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은 일시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자체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마비를 극복하고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북한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2003년 이라크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전쟁선포는 북한으로 하여금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수백만의 사상자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옵션과 구체적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은 북한이 의지하는 중국 당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포기하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함
  -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은 북미 간에 대화를 고려하기 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불법적인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중단하는 확실한

**백악관의  
대북 정책 검토  
(policy review)에  
‘군사공격(military  
strike)’ 이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조치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4가지 카드를 중국을 통해 전달했다고 전해지며, 그 핵심 내용은 미국이 추진했던 북한 정권교체, 김정은 체제 전복, 남북통일 가속, 미군의 북진 등 적대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내용
-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가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대북한 직접압박과 중국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제제재를 추진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한계는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및 국제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군사적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아 니라는 것이 현실적 한계

○ 한국은 탄핵국면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6개월간 중단되었다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관한 공조를 확인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임

-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양국 정상은 동의하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언급
- 총론적인 부분에서 안보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사드배치, 사드비용의 부담,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세부안건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이견이 희석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

○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FTA의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위협

-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천명
-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

-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산업계의 반대에 직면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 완제품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 왔지만 미국 내 기업은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FTA 재협상에서 과도한 관세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행보를 시사
  - 미국은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의 확대에 따라 비핵화를 위해 참수작전과 외과수술적 군사조치를 통한 레짐 체인지에서부터 평화협정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평화적 접근까지 모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적 행보도 추진할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과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 등을 근거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
  -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따라 미국은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로 배치하고 미 국방부는 5월 30일 태평양 마셜군도 과잘레인 환초에서 발사된 모의 ICBM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
-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한반도의 전쟁을 피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태도전환을 추구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재고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의 입장을 유지했고 다른 후보로부터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안보 문제를 통한 사상검증을 경험했지만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함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내세우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10년간 북한을 고립시키는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미국은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의 확대에 따라 비핵화를 위해 참수작전과 외과수술적 군사조치를 통한 레짐 체인지에서부터 평화협정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평화적 접근까지 모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가속화시킨 반면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은 핵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한 적도 있음에 주목

- 미국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전제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소수의 목소리
  -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움직이도록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지원 중단과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구상
  - 지난 25년간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정책 구상을 발표
  -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흡수통일 과정에 미·중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미·중 및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재건하는데 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한국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주변국의 애매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무기의 소형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발사체의 개발에 성공
  -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조치를 추구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이 ICBM 발사 성공과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지금에 와서는 미국도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방치를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대응
  -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
  - 이런 새로운 국면에 한국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전술핵 도입이나 독자

핵무기개발과 같은 정책이나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에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성급한 정책결정보다는 한미공조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책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

**가. 한미동맹의 효율적인 작동과 한반도 비핵화, 정확히는 북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

- 북핵 해결에 한·미공조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이 요구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고 한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정책공조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조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한 대응에의 유화적인 입장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대화를 재개한다며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노선과 불일치를 보임
  - 북한은 유엔제재가 지속되는 강경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은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난제로 보임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날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 한국의 국내정치적 불안 속에도 사드(THAAD) 배치는 북한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미동맹의 핵심 연결고리로 인식
  -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 안보위협이 드러날 때마다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전략 폭격기와 원자력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보복을 결정하는데 결정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미국의 핵보복 결정은 한국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날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북한에 대한****효과적 대응을 위해서****한·미동맹과****미·일동맹에서****미국의 역할과****한일관계의****고질적인 역사 및****영토 문제에 대한****한국 국내여론의****부정적 시각의****해소가 필요**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의 정도를 줄여나가고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점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 한미동맹의 신뢰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필요
  -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에 합의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을 주장, 2010년 6월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자로서 2012년 당시에는 계획대로 전환을 공약했지만 2013년 정상회담 이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2013년 7월 전작권 재연기를 제안했고 7월 23일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공약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 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
  
-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일관계의 고질적인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여론의 부정적 시각의 해소가 필요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증진에 핵심고리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위안부협정을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상당한 결실을 보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한국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한이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되어 있고 보안감사와 같은 사후조치를 취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이라 하여 국내 여론의 반대가 비등
  -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고 조현 외교부 차관은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고 밝힘
  - 한일관계 균열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추가건립과 관련, 일본은 대사소환, 통화스왑 중단,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로

대응하면서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거치고 있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어려운 국면

-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안보불안 요인의 가중과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요구되는 상황
  - 초기에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과정에 한중관계의 외교적 마찰과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흑자를 얻는 국가의 방위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문제를 미국의 희생으로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동맹의 의무’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한 관행을 문제인 정부가 비판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 시기 한미가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면서 매티스 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실질적 문제”로 규정하고 배치 철회는 없다는 점을 확인
  -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문제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국내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안보 문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려있기는 하지만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음
  - 트럼프는 4월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끔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한 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끝나는 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
  -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169억 9,300만 달러 그리고 일자리 손실이 15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 경제의 손실이 예상
  -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였지만 한국의 입장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며 정말 미국만 손해를 보는지 분석을 먼저 하자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1순위로 언급하던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취지로 답한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 등 미국 내 수입산 철강제품 사용업체의 반대와 유럽연합(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안보 문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려 있기는 하지만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음**

-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회의장 선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에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재협상은 소강상태를 맞고 있음

#### ❖ 저자 약력

#####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 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
  - 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
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 1. 들어가는 말: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

- 문제 제기: 한중관계 관련 데이터의 필요성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어 중국(대륙)은 경제적으로 기회의 지역이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지대나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되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중국은 역사·문화·사회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금지되었다가 개방된 신비한 지역이었음
  - 이에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업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의 포괄적이고 좋은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 과거의 상황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자본력·기술·산업경쟁력 우위라는 장점으로 중국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아 왔음. 그러나 중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빠른 시간에 산업혁신을 이루어내며 국가인프라 건설과 동시에 인재를 포함한 소프트 파워·경제·군사력을 동시에 발전시켜 실제적으로 세계 G2의 위치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IMF경제위기와 기타 국내 상황으로 제대로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게 되었음. 혹은 관찰했더라도 그 변화가 너무 빨라 이것을 한국사회에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봄
  - 한국은 한미동맹의 구조에서 안보를 유지하며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경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은 지도 20여 년이 되는데,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 체험지수가 높지 않아 중국의 정치적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인 공산당의 체제와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분석할 필요를 찾지 못했음
  - 그리고 현재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거대해진 중국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실제적으로 그 체험지수가 높지 않아 중국의 정치적 흐름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인 공산당의 체제와 운영시스템도 제대로 분석할 필요를 찾지 못했음*

**혹은 이미 강성해진****중국이 한국을****중국식으로 길들이기****위한 전략으로****보이기도 함.****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있어 한반도라는****지정학적 위치는****매우 중요하기에****중국이 쉽게 한국과****북한을 멀리할 수 없는****상황임**

되었고, 게다가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sup>1)</sup> 즉,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 한국의 관계란 남북한 대치상황 속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대북 안보 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 국제관계에 반응하고 있는 형세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국가 건국 이후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외부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존해 중국을 바라보았기에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을 키우지 못했고, 항상 외국의 자료와 일부 전문가의 경험에 의지하여 중국을 이해해 왔기에 판단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음. 즉, 초기 대만이나 미국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대국으로 중국을 연구하였는데, 중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드나들던 한중수교 이전의 홍콩지역의 중국연구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연구이기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연구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국’ 연구는 아직도 중국연구의 주류라고 할 수 있음
-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연구라는 것도 미국 내 연구방향과 유사점을 유지하기에 학문적으로도 한국의 중국 정치연구는 중국 자체의 연구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음. 또한, 이러한 연구내용이 사회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국사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의 중국연구는 힘들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냉전적 사고의 연구나 서구나 일본의 연구에 기초하여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 중국의 정치적 이론이나 가치관은 한국학계나 중국 관련 연구부서에서 단지 ‘중국의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냉전적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국익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체의 핵심과 그 운영체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국은 대만, 홍콩과 같이 1970년대 후반부터 덩샤오핑(鄧小平) 등 개혁파가 추진하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한 점이 있음. 즉, 우리는 대만이나 홍콩의 학자들과 같이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에 성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경쟁력 증가는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나 한국 제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가 경제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축소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처우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즉, 현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도 중국에 있어 한국제품이나 자금의 효용가치가 낮아져서 나오는 현상이거나 혹은 이미 강성해진 중국이 한국을 중국식으로 길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기도 함.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 있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 매우 중요하기에 중국이 쉽게 한국과 북한을 멀리할 수 없는 상황임
  - 한중 지도자의 상호방문이나 최근에 진행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보면 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역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한중관계가 과거 인적 친분에 과다히 의존하여 상호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거나 때로는 중국의 일방적 대화단절로 서로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것은 사실임
  - 또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 틀로 중국과 협상하면서 그들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고 봄. 예를 들어, 회담에서 공산당 통치자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양하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던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우리의 소기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회담에는 정부가 기존의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봄. 즉,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연구와 준비를 하듯이 중국과의 협상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시기임
  - 한 예로, 중국과 협상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것이나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은 공산당의 정치이념에서 쉽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론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
  - 한중관계의 효과적 데이터 관리란 수교 전 단계부터 한국 정부가 중국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인사들과 교류 및 회의했던 내용과 경험 그리고 중국 공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노하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외교현안 결정에 적절하게 활용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즉,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업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존 데이터를 구축하여 중국 정치의 흐름과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봄
- 한국 정부, 학자, 경제, 언론·문화인, 일반인이 보는 중국<sup>2)</sup>
- 중국연구와 분석에는 언어능력과 기존 연구지식 및 중국 사회·문화에 이해가 종합되어야 함. 때문에 인문학적 중국연구가 언어와 문화에 기초하여 중국연구의 시작이라면, 정치학적 중국연구에서 공산당 체제와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자료수집과 그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임
  - 중국연구학자들이 보는 중국에 대한 시각은 전 세계적 국제관계의 틀에서 한중관계를 보는 시각도 있고, 한중관계의 틀로 동북아 국제정치를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업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정책결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존  
데이터를 구축하여  
중국 정치의 흐름과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고 봄**

**한국의 중국연구자  
중에서 서구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중국을 분석하는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중국적 특색'이라는  
중국 국가 정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는 시각도 있고, 한미관계와 미국의 세계정치의 틀로 한중관계를 보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일부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 기초하여 한중관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남북한관계의 틀도 한중관계와 비교하며 보는 현상도 발생함

- 중국연구에서 자신의 연구와 경험에 근거한 접근법은 그들이 공부한 지역과 전공에 따라 자신이 접해보지 않은 지역의 내용을 흘시하거나 혹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으로만 중국과 중국의 현상을 분석하려 하기에 중국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중국인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사례는 한미나 한일 간의 대화 혹은 한·대만 간의 소통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구는 해당 국가의 연구와 그 지역 사람과 소통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에서 중국을 관찰하는 방법은 기존 대만에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연구하던 '부정적인' 시각으로의 연구와, 구미(歐美)의 '민주·자유·평등·인권'에 기반한 중국 정치의 비민주적(독재적) 체제를 '중국적 특색'<sup>3)</sup>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주의 적대국가로 분석하는 연구가 중심이었음. 이에 공산당 지도체제의 조직적인 통제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중국에 새로운 '민주화'의 변화가 올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고 봄. 즉,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중국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임.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아직까지 평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음. 부정적 시각의 중국연구는 중국 국가체제와 그 통치그룹인 공산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요인으로 보이기에, 연구를 위해서는 잠시 그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봄

- 한국의 중국연구자 중에서 서구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중국을 분석하는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중국적 특색'이라는 중국 국가 정황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중국적 특색'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적 특색이란 함의가 갖고 있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봄. 중국적 특색이란 사회주의 중국의 정체(政體)로 정치·행정·군사·문화·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자신만의 체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을 얘기하는 것임

- 한국의 학자 중에 대만에서 유학하며 중국(대륙)을 적대지역으로 보며 공부를 한 세대나,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공부한 유럽적 가치관으로 중국을 연구하던 세대,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적 가치관을 배우고 공부한 세대의 학자들에게는 구미(歐美)에서 공부한 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 즉, 이들은 중국의 변화를 바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중국의 현실과 가까이 하려는 성향도 있다는 것임.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는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매력 때문에 연구자들은 때로는 중국 정치의 실체를 혼동할 때도 있음

- 반면, 서구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중국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그들과 서구식 토론이나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식 혹은 동양식 협상을 하려고 함. 즉, 중국을 연구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중국을 적대국으로 연구하는지 혹은 협력대상으로 연구하는지에 따라 그 분석내용이 다를 수 있고, 중국인들은 우리가 서구적 사고를 갖고 있어도 우리를 동양적 사람으로 받아들여려 아전인수나 유아독존적 사고가 작용한다는 것임
- 동양식 접근이란 우리가 일반 사교자리에서 교재 할 때 그들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쌍방이 의도한 최종 협상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즉, 이러한 양자 간의 선입견과 주관은 서양식 협상에 익숙한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서로의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쌍방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관념으로 받아들이며 회담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결과도 발생하게 함. 즉,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관, 국가체제 및 대화방식을 포함한 교류방식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한중 양국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더 자주 만나 형식과 본의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어야 서로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sup>4)</sup>
- 중국연구를 구미에서 한 경우나 중화권지역에서 한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나지만 현장경험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중국 정부나 사회에 대한 시각이 다른 지역인, 예를 들어 대만이나 홍콩 혹은 싱가포르지역의 중국연구도 서로 같은 연구대상을 연구하지만 그 목적이 다른 이유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해석하게 되는 부분도 있음. 즉, 다각적으로 중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연구하는 여러 나라의 기관들을 통해 중국연구 내용을 섭렵하는 것이 좋을 것임. 예를 들어, 러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및 일본과 구미의 중국연구를 통해 중국을 보는 시각과 핵심 정책이나 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면 중국을 보는 여러 시각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정부나 관료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봄
-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보고 접하는 방법은 이들이 중국 지도자급과의 교류를 위해 정치적 만남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중국 정치인들의 사고와 행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이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중국 정치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중국연구를 구미에서 한 경우나 중화권지역에서 한 경우 모두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나지만 현장경험과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봄**

**한국의 언론기능이****자유로운 반면에****중국은 언론이****정부에 통제를 받기에****중국 정부와 중국인이****보기에 한국의 언론이****이상하게 보이는 것임.****그러나****한국의 언론이나****중국의 언론은****모두 매체를 통해****직간접적으로 한국과****중국을 사람들에게** **좋게 혹은 나쁘게** **보도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봄.<sup>5)</sup>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인들은 개별 배경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국을 이해하고 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나지만, 정치인들은 중국 지도층과 교류하기 위해 인간적 접근방법을 많이 활용하며 교류에서 서로의 관계를 배려한 정치적 술어를 많이 사용함.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중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인이나 외교관 및 기업인 모두가 배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언론의 경우, 한국의 언론이 중국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는 한국 언론의 초점과 대상이 한국사회이고 그 참고하는 내용이 서방의 뉴스공급처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한국사회에 중국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 언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언론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사회의 부패와 문제점을 지적하듯이 이를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반중국정서적 보도가 많이 나올 수 있음
- 즉, 한국의 언론기능이 자유로운 반면에 중국은 언론이 정부에 통제를 받기에 중국 정부와 중국인이 보기에 한국의 언론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임.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언론은 모두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사람들에게 좋게 혹은 나쁘게 보도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중국 전문기자들의 경우, 중국을 알려거나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도 꾸준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보자는 시도의 기사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중국사회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사업이나 유학 등으로 중국 각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업 및 현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정서적(情緒的)으로 중국을 인정하며 중국을 좋아하는 부류도 생기게 되었음. 이들이 이해하는 중국이란 생활을 통해 중국사회와 중국문화의 특징을 개인적 관심이나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해하는 것으로 개별적이고 다양한 이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이해가 중국의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봄
- 이러한 중국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사회에 대한 개별적 이해와 한국의 대중정책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국가는 한국과 국제환경을 두루 살펴보며 종합적 국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임. 이들이 가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지능력에 따라 중국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 이들은 중국사회를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직접 체험하며 지내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로 이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중국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임
- 한국에는 중국어나 중국문화와 인연이 없고 한국의 전통적 한미동맹과 한국과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중국의 가치관이 세계 보편적 가치관과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나 그 사회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음. 즉, 중국과 접촉이 적은 사람일수록 중국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선입견은 좋지 않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이들은 민주나 인권 등의 문제에서 중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일당독재체제의 중국을 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이런 사람들의 경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극히 더 불편함과 불공정함을 표현함.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국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경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가치관에 평등과 민주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그 잣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대국(大國)이라는 이미지인데, 중국 정부가 최근 대외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대국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중국을 비난하기도 함
  - 개인적으로 한국전쟁에서 한국이 미국과 연합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사회에 이바지하게 된 우리의 현대사를 경험하거나 학습한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적 가치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대한 이해를 서방 민주국가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민주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게 되며 중국의 비민주적체제를 비난하게 됨. 즉, 이들은 중국의 ‘특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경험이나 인류보편의 가치에서 중국사회를 보려는 부류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인에 있어서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 중국과 인연을 맺고 중국인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국가정책보다 그들의 중국에 대해 개인적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갖고 있는 중국 관련 지식을 통해 중국과 세계 그리고 다시 한국을 보는 경우도 있음. 수교 후 계속하여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은 한중관계의 문제를 그들의 현실적 관계와 정서 및 개인적 전문성으로 보게 되는데, 중국사회의 특성상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판단이 한중관계의 기본 평가척도로 작용하게 되기도 함<sup>6)</sup>

**이들은 민주나 인권 등의 문제에서 중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일당독재체제의 중국을 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함. 이런 사람들의 경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극히 더 불편함과 불공정함을 표현함**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가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과  
공무원과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임**

- 일부 한국인들 중에서 중국 전문가나 중국 관련 영역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중국인들과 접하면서 중국인들의 사고를 대변하는 듯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중국정치적인 체제와 중국문화적인 사회를 쉽게 혼동하며 중국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개인이 터득한 문화적 경험에 따라 중국적인 것을 미화하게 되는 경우도 생김. 혹은 이런 가치관이나 표현방식으로 중국과 소통하며 이것이 평상시 한중관계를 보는 기본 틀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음<sup>7)</sup>
- 중국 정부와 사회 그리고 중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각
  -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중국 인민들의 국제적인 감각은 오히려 동양적이거나 혹은 사회주의적 조직사회에 기반을 둔 봉건시대 귀족이나 백성과 같은 면도 있음. 그리고 이들은 현실적인 사회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임. 이들의 기본적 특징은 좋은 선물을 주거나 체면을 유지시켜주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을 주면 쉽게 친구가 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실리(實利)와 체면(體面)을 동시에 존중하는 관습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한중관계에서도 양국의 관계는 호혜평등에 기초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중국은 강대국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표현이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임.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양국 정부나 양국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 틀은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임. 즉, 상호비방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획득하는 것은 양국의 장기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가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과 공무원과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임. 비록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만약 가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게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의견을 알기 위해서는 공산당 체제(體制)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개인적 의견보다는 당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 정부의 정책과 다른 시각에서 중국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중국지역은 아마 대만(혹은 홍콩의 일부세력)일 듯한데, 대만은 중국대륙과 대립하는 시각에서 한국과 단교 후 한국의 유용성을 보며 각 상황을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대만은 통일 문제에서나 중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서로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호 경쟁하며 상대방이 자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면서 서로 협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대만 간의 협력은 중국의 입장에서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그 선명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연구에는 아직도 대만(구 중화민국)의 연구방법으로 중국을 보는 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의 중국연구에 대만은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중국연구와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들(대만 등 중국대륙 외부 중국인과 중국 특별행정구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과 중국대륙의 중국인이 보는 한국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즐기는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즉, 전체 중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에 대한 공통적 의견은 경제와 문화적으로 발전된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생활을 즐기는 민족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임. 반대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생활리듬이 빠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들의 사고에는 중국 공산당이 오랜 기간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선전하여 왔고 과거 한국전쟁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정신을 강조해 왔기에 아직도 북한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임
- 중국의 공무원, 학자 및 상인 및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중국 인적 정서와 지역적 정서의 차이에 따라 표출되는데, 여기에는 민족주의적 감정도 많이 작용함. 개인적으로 한국과 한국에 대한 감정이 없던 사람도 정부의 정책홍보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대하는 정책이나 행동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중국 인민들은 혐한(嫌韓)으로 그 애국민족의 정신을 불태우고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적극적 반응을 보임. 개인적으로 중국인들은 중국민족이나 중국이라는 국가 앞에서는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애국애족을 표현하는 모습은 중국 근현대 역사에서도 많이 나옴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 2.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 ○ 동아시아 국제정세

- 최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軍事崛起) 있는

**아베 정부는****미국과의 협력으로****전쟁 재발을****방지하기 위한****일본의 안보능력을****극대화하려 하며****북핵 위협도****국내정치에 적절히****활용하고 있음**

것은 바로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로 나오기 위한 전략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그 역할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보면, 과거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반대하며 일본을 지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겼던 ‘카쓰라 태프트 밀약(가쓰라 태프트 조약)’ 내용과 같이 지금에는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막아주며 러시아에도 견제가 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미일 동맹 전략과 ‘중국 포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즉, 미국은 동북아와 서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벌어진 냉전적 대치와 사회주의 확장정책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는 전통적 냉전의식을 갖고 있고, 이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즉, 동북아에서 세력 경쟁이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대결로 보이는데, 이를 한반도 주변 4강이라고 하며 남북한의 대치는 이들 경쟁의 중간에 위치한 형상임. 이러한 세력과 세력 간의 경쟁에 도전적 행위로 그 밸런스를 깨거나 자국의 입지를 상승시키려는 시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 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미일 동맹관계에서 남북으로 나뉜 한반도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자, 이 동맹으로 이 지역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임. 동시에 동북아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지역이기에 미국의 군사산업의 상업적 목적도 존재하며, 미국은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인구밀도 및 인구분포도가 높은 동아시아의 시장가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을 섬기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가야 하는 상황임. 미국과 협력하다 급작스런 진주만 공격도 해 보았던 일본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안보를 획득하려는 의도와 일본의 국력증강의 목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북핵 위협도 국내정치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즉,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익확보와 북핵 문제와 동북아 대립구도를 국내정치에 적절히 활용하며 집권당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탈되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오거나 혹은 협력적인 관계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전략도 이와 유사한 것임.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보는 입장에서 한국인의 정서가 일본에 비해 중국인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나 후에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대) 영토를 놓고 실제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북한은 수령제 제3세대 지도자 김정은이 통치력을 강화시키며 대외 문제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즉,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획득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최종 협상의 고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북미협상을 하여 소기의 목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언급한 적은 없음

○ 미국의 정책과 중국의 도전

- 중국이 강대국을 목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강조하며 “태평양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夠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으로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중국의 전략과 본격적으로 대치하기 시작했으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강한 대치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득을 취하며 국력신장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음. 이것이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임
- 과거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익(核心利益)이 걸려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오다가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되었음. 즉,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저해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비한 대외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이들에 의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더더욱 그러함
-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해 ‘강군몽(強軍夢)’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군사력증대는 국가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혹은 강대국 간에 분쟁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보임.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보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미중회담이나 그 협의조건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맞추어 주며 내부적으로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저해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이에 대비한  
대외정책이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의 꿈(中國夢)’  
을 이루기 위해  
‘강군몽(強軍夢)’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군사력증대는  
국가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혹은  
강대국 간에  
분쟁의 소지는 상존**

**중국****강대국의 꿈을****실현시키기 위한****강대국 외교와****주변국 외교를****효과적으로 병용하며,****‘일대일로’를****추진하면서****중국의 영향력을****강화하려는****전략을 구사하지만,****현재 중국은****‘평화로운 발전’을****주장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한반도해역에서도 해당 국가 및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형태인데, 중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과 공군력 및 미사일부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서태평양지대에서 적어도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중국의 소리를 내며 동북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하는 군사전략과 외교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설정한 대결구도는 미중관계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대만을 통일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양에서 중국의 확장정책은 동남아와 인도양, 남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중국 과거의 영향력 회복이라 주장하는 ‘일대일로’ 정책으로 나타남.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과거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한국전쟁 참전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 기초하여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는 군사, 정치, 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여 있지만, 그 핵심은 중국 주권의 회복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인들의 민심을 응집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함. 중국은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통일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평가되기도 함.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은 전통적 안보개념 외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 시진핑 시대 중국은 이전부터 주장되던 중화민족의 꿈을 ‘중국의 꿈(中國夢)’으로 추진하는 현실적 시대에 들어섰음
- 현재 중국은 강대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대국 외교와 주변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병용하며,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현재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장기적 발전을 위해 몸을 낮추고 있는 전략으로 보임
- 이미 중국이 회복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통일을 목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대대만 전략은 모두 중화영토의 확장과 그 영향력 확보에 기초한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를 기초로 한 중국의 전통적 천하통일론과 같은 중화사상이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중국은 때론 이 중화사상에 기초한 외교를 주변국 외교에도 사용하고 있음. 사실 ‘일대일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전략에도 이런 잠재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중국은 자국의 경제·외교·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 ‘AIIB’와 같은 중국과 세계가 연결되는 산업 및 금융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꾸준한 전략적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 동북아 국제관계는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동맹체제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체제의 대립과 북핵 문제와 양안(兩岸) 문제라는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도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임.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전략은 모호하게 중국의 국가이익에 근거한 실제적 국가안전과 중국영향력 확보를 위한 완충지대 혹은 교두보 확대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됨.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책은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실제로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의 주변안정이라는 문제와 자국의 안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부 문제를 외부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 민심수습과 단결에 그 핵심이 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음. 즉, 올해 공산당 19차 전당대회를 향한 강한 지도력 구성을 위해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요인 외에 전통적 안보개념 그리고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적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미국세력과의 경쟁은 과거 한국전쟁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은 기초에서 중국이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즉, 실제적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 국내의 정치와 외교적인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주위의 다른 막료의 조언으로도 그 문제를 철회하기는 힘들다고 함. 즉, 지도자가 이에 대한 사고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임
  - 혹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로 중국이 가하는 경제적 제재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또다시 한중관계에서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경도가 될 때까지 그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동안 공산당이 한국전쟁과 중국의 입지에 대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선전한 내용에 명예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중관계 문제는 중국의 국내정치를 관망하며 이 문제의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것임. 즉, 중국 국내정치 환경이 대외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요인 외에  
전통적 안보개념  
그리고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적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들어****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11월 미중회담을****준비하면서 미중회담의  
의제에 중국의 국익과****관련된 현안이 많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에****보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실제로 중국이****한반도에서 북한에****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판단됨**

통해 보면 중국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 개선의 조짐도 알 수도 있다는 것임. 즉, 중국 지도부의 한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및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한중관계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임.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의 판단과 시진핑 주석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봄

- 최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11월 미중회담을 준비하면서 미중회담의 의제에 중국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이 많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도 판단됨

### 3.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 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의미

##### ○ 전통적 한중관계

-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매년 중국대륙에 통일왕조가 형성되거나 왕조의 쇠퇴로 혼란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외교관계 형성에서 ‘대립’이나 ‘협조’라는 외교노선을 추구하며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왔음.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중 간의 마찰은 과거 역사에서 겪은 내용의 재연으로 보이나, 이것이 현실적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음. 과거가 한국과 중국의 일방적 관계라면 현재는 국제관계의 현상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다자관계에서의 일방에 대한 제재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중관계도 쌍방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임
- 한반도의 삼국시대에서 신라의 통일과 고려, 조선왕조로 이어지는 동안 한반도는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세력에서 문화적 선진민족이라는 중원에서 출발한 한족(漢族)의 왕조와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경제·문화 교류를 하였다면, 동북의 이민족세력이나 그 왕조와는 완강하게 대립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한국은 중화세계에 패자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협력과 갈등도 상존했음을 알 수 있음. 즉, 한중관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과거 한중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잘 파악할 필요도 있음

##### ○ 1910~1945년의 한중관계

-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중국대륙의 상하이(上海)와 연안(延安), 동북지역과 연해주지역은 나라 잃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의 장이 되었음.

당시 한국인들은 중국의 여러 세력과 협력하며 조국의 독립을 획득하려 타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같은 전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외부의 적과 대립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우리의 동맹 국가가 중국의 잠재적 경쟁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미관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봄. 특히,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대북한 정책과 미중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봄

- 한국인이 아시아대륙에서 행한 독립운동은 국민당 정부와 협력한 독립운동도 있고 공산주의자와 같이한 독립운동도 있으며, 동북지역에서 중국 동북항일조직과 같이한 독립운동 그리고 러시아지역에서 진행한 독립운동 등도 있기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모든 정파와 지역을 통틀어 전 중국인과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1949년 분열되기 이전까지 독립을 염원하던 한국인과 독립 후의 한국인은 모두 중국 정부들과 협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할 수 있는 근대사의 중요한 협력근거가 될 수도 있음
- 중국과 대만이 분열되고, 우리가 대만과 오랜 기간 수교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년 중국과 정식 수교한 관계를 보면 한국은 꾸준히 중국과 교류를 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한국은 대륙과 붙어 있는 반도국가 이기에 지정학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과 대륙 국가와의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한중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서로 협력의 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반일정서는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중관계와 한일관계라는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미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임.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의아해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보임
- 중국에서 한국전쟁 관련 영화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때로는 방영되기 어려우나, 항일전쟁 영화는 중국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북아국가의 역사의 굴절을 의미하는 것임. 즉, 중국은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측면에서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는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한중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서로 협력의 끈이  
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반일정서는  
한국과 중국이  
연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실, 한국과 중국의  
냉전 시기 대립의  
상처가 형식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그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속에서  
천천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전쟁과 한중관계
  - 한국전쟁은 북한의 도발로 한국전쟁의 결과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냉전시대를 맞이했는데, 냉전체제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국제관계를 주도했고 이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이 되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중국은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유지하며 한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에 일부 한반도 분쟁상황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기도 함
  -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명분으로 인민지원군을 참전시켜 북한에는 혈맹으로 우리에게는 역사적 전쟁의 적으로 기억되고 있고, 한국전쟁에서의 한중의 적대관계는 한중수교를 맺는 1992년까지 이어지다 수교에 이르지만 아직도 한중관계에는 많은 역사적 그리고 현실 체제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
  - 사실, 한국과 중국의 냉전 시기 대립의 상처가 형식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그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의 틀 속에서 천천히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관계에서 서로의 양극과 역사적 기억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1992년 수교 후 한중관계
  - 한중수교의 국제적 배경은 미소가 1989년 12월 몰타정상회의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 방문으로 중소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1990년 9월 한소수교가 수립된 것 등이 한중수교의 디딤돌이 되어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정식 수교를 하게 됨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수교로 양국의 교류를 새롭게 개시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한중관계는 수교 후 꾸준히 양국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기초로 정부의 주도 아래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
  -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어 한중관계도 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최근 박근혜와 시진핑 정부 시기인 2015년에 한중관계는 한국의 AIIB 가입,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한중 FTA 비준 등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한 한 해였으나, 2016년부터 북한의 핵도발이 더 빈번해지고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가 나오며 한중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음
  - 한중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든 이유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안보의식 강화와 미국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적극 개입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미중 간의 대립과 남북한의 대치가 한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 볼 수 있음

**나. 한중관계에 잠재된 모순점**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 현재 한국과 중국은 수교된 지 25년에 서로 경제·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와 협력 및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의 축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됨. 즉, 동맹이라는 구조에서의 안보 요인이 결국 국가 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임
- 특히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한 대치 문제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한미동맹은 전체적으로 중국이 한국과 교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대립의 완충요소로 북한을 어느 정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음. 한미관계는 현재 한중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고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의 모순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임
-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북한과도 수교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중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 중국은 ‘2개의 한국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중관계는 탈북자 문제 등에서 항상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한·대만관계도 양안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안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외에 한국과 중국의 역사 및 영토 분쟁, 해양영토와 어업권 분쟁 그리고 무역과 금융 등의 분쟁도 한미동맹과 한국과 중국의 다른 안보대립이라는 분쟁 이상으로 항상 잠재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중국이 보인 태도를 보면 중국은 ‘2개의 한국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중관계는 탈북자 문제 등에서도 항상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4. 결론: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과제**

○ 최근 중국 국내 상황과 대외정책

- 현재, 중국 공산당의 중국 통치와 국제관계에서 정책의 많은 부분은 공산당의 건국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97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결과와 현재 새로운 중국의 건설이라는

**공산당의****국제정치적인****시각에서****중국을 국가이익을****인민의 이익으로****동일시하며 이것을****성취하는 것이****공산당의 정치목표라고****주장하기에 공산당과****정부 그리고****정부기관인****학교와 연구소 및****언론기관은 모두 같이****대내외적 소리를 내고****있다고 봐야 하는데,****이것이 중국 외부로****반영되고 외부의****현상은 국내정치와****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의 꿈’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연속과 지속성이라 할 수 있음

- 얼마 전 중국의 학교와 기관 및 관련 회사들의 정부 관리와 인터넷 검열이 최근 더 엄격해진 이유는 11월 공산당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 11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즉,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로 접어 든다고 할 수 있음

- 때로는 홍콩에서의 반중시위를 보면 중국의 정책이 홍콩에는 그리 통하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즉 중국의 행정제재나 홍보 정책이 중국 역내에서 직접적 통치를 받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거나 반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진 것을 보면 앞으로 홍콩이나 마카오도 더욱 중국 정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할 것으로 보임

- 대만 민진당은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이견이 꾸준히 많고 대만이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중국과 대만은 결국 통일이나 독립이나 혹은 공산당이나 대만의 민진당 세력(혹은 국민당 세력)이나를 두고 꾸준히 쟁론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언젠가 이 부분도 국제정치의 큰 분쟁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 중국과 우리 상황에 대한 재인식

-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리고 공산당의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중국은 국가이익을 인민의 이익으로 동일시하며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치목표라고 주장하기에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정부기관인 학교와 연구소 및 언론기관은 모두 같이 대내외적 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중국 외부로 반영되고 외부의 현상은 국내정치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음. 즉,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 의견이 쉽게 통합되고 이것이 국내의 정치와 공산당 통치로 융합된다는 것임

- 중국사회의 통치방식은 공산당의 조직이 정부행정 부서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조직이나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공산당이 항일전쟁과 국민당과 내전을 할 때도 사용하였던 ‘선전전술’로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의 전달과 이에 대한 지지’는 중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예를 들어 사드배치 문제에 관한 내용의 진전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됨

- 중국사회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이 정부와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며, 심지어 공산당 조직원도 이 조직을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의 군사와 행정 및 사회 모든 분야는 공산당의 영향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음. 중국 정부의 정책은 지도자의 연설이나 좌담 혹은 정책발표 등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정책방향으로 연결됨
-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이나 제재는 바로 공산당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혹 중국의 지도자나 지도부와의 인연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지만,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음
- 중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중국의 언론매체를 오랜 시간 보다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평화를 강조하며 협력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정책이론이나 언론홍보가 이미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제는 외국으로까지 이를 송출하며 국가정책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으로 보임. 즉, 공산당은 중국 정치에서 군사와 정치·행정체제는 어느 정도 장악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가시적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 중국어에 능숙하고 중국사회에 융화되어가는 사람들은 즉, 한국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 외국인들도 중국 공산당의 정치나 대외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한마디로 동북아 국제정세에는 세력경쟁 외에도 체제나 가치관의 대립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임
- 한국에서 한국의 학자들과 구미학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는 것임. 비록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류도 있지만 미국과의 교류와 협력 및 협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낸 한국과 한국인에게 있어 중국의 중국인들과의 협상이나 중국 정부의 정책에는 아직 많은 거부감이 있어 보임. 즉, 한국은 당분간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판단됨
- 중국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 건설과정과 건국이념 그리고 통치에서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공산당이 얼마나 받아들이며 통치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국내정치 외에 대외정책도 이해할 수 있기에 중국연구에서는 공산당 통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작년 중국이 한국에 어떠한 제재를 할지에 대해서도 중국 시민 사회를 통해 중국

**한국에 대한 반한감정이나 제재는 바로 공산당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혹 중국의 지도자나 지도부와의 인연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지만,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음**

**한중관계는****경제·무역적인****입장에서 보면****한중관계의****경제적 효율도****미국의 국내외****경제정책과****한미관계에 영향을****받는다고 할 수 있음.****다시 말해,****한국과 중국의****경제적 의존이란****양국의 내수시장을****제외한 제3국 수출을****중심으로 하는****상품에 있어서는****미국과 제3국의****대외경제정책이****영향을 미치고****있다는 것임**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우리의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판단에 의해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한국제품이나 한국에 대한 제재적 반응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공산당과 인민과의 관계를 간과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봄. 혹은, 이에 대한 판단을 중국 내 정부정책이나 그 시행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공산당 정책을 우리에게 편리하게 판단한 데도 문제가 있음

-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들이 한중관계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음
- 즉, 한국은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기본 전제에서 한미관계를 존중하는 틀에서 한중·한러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임. 또한, 한중관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독립변수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중미 간 마찰 부분의 내용은 가능한 한 간접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함
- 한중관계는 경제·무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중관계의 경제적 효율도 미국의 국내외의 경제정책과 한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이란 양국의 내수시장을 제외한 제3국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미국과 제3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한중관계에서 쌍방의 경제적 영향이란, 양국의 기본적 내수에 기반한 수출입구조와 관광산업분야에서 양국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소비정서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한중관계의 변화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들의 한국 내 소비가 줄어들고 또한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 정부정책에 따른 언론 홍보영향으로 반한감정이 증대하여 소비심리와 정부정책이 동시에 한국과 한국인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 즉, 양국의 모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영향이란 강대국 세력경쟁과 지역 안보 구도에서의 동맹국이나 협력국가들과의 공조 및 이에 기반한 국내의 국가정책이 양 국가의 교류나 그 국가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임
-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한미관계나 남북한관계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보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한중관계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한중관계의 경제적 상호배려라는 우호적 정책이 국가안보 정책에서 나타난 불만으로 그 배려가 줄어들었거나 혹은 상반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각 국가의 안보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상호

- 경제적 호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됨
- 한중관계 모순과 마찰에 대한 해결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양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봄
  - 한국이 중국과 교섭하며 사드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구조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중국 자체의 변화를 기다리며 현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 현명한 전략일 것임. 즉, 중국 지도자의 사고가 바뀌기 전에 한국인이 대국인 중국에 어떠한 요구를 해도 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중국에 있어 어떠한 답이 나올 수 없고, 지도자의 말이 거의 법과 같은 현 상황에서 누구도 지도자의 사고를 바뀌게 하는 모험을 하여 자신에게 화를 자초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됨
- 한국의 선택 가능한 대중국 외교와 교류방법
-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 있어 측은 한국이 주체가 되어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력외교가 추진되어야 함
  - 한국 정부에서 중국을 보는 입장은 수교 후 여러 차례의 모순과 마찰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상방법을 익혀나가고 있으나, 중국과의 교섭에서 중국이 일률적으로 대화 창구를 통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나쁠 경우 소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이러한 소통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고위층의 인적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간접적으로 중국의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제3국의 채널을 형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해 보임.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및 군부 및 공안 인사들과의 정부 차원 교류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인적교류에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데이터 정리도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한국이 대중국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제3국이 보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의 평형을 찾아야 한다고 봄. 당시 적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이 보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한중관계를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발생한 한중마찰도 이를 고려하며 한국의 대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중국의 제재도 미연에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한미관계라는 전통적 틀과 한중관계라는 새로운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경제적 측면이라면 냉전의식이 존재하거나 북핵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프레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에 이에 대한 신중한 외교적 선택이 있었어야 한다고 봄
  - 우리가 강조하는 중국인의 ‘관시(關係)’에 기초하여 중국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사회문화의 중요한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이라는 통치구조에서 당의 ‘정치이론’에서 강조하는 인민을 위해 일하는 공산당이

**우리가 강조하는  
중국인의  
‘관시(關係)’에  
기초하여  
중국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사회문화의  
중요한 네트워크이기는  
하지만, 공산당이라는  
통치구조에서  
당의 ‘정치이론’에서  
강조하는  
인민을 위해 일하는  
공산당이  
국가의 중심이라는  
전제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너무 간과한 부분도  
공산당의 정책판단을  
세대로 하지 못하게  
된 원인**

**항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언젠가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양국 정부 관계가  
원만 할 때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

국가의 중심이라는 전제주의체제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를 너무 간과한 부분도 공산당의 정책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보임

- 즉, ‘판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공산당 지도체제의 ‘판시’를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공산당 지도체제는 ‘출생배경·당성(黨性)·추천인·개인능력 그리고 인적관계’라는 것을 보면 중국사회의 일반적 ‘판시’와 중국 공산당의 인적 네트워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일반 중국사회 이해를 통한 중국 공산당의 이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판시”의 형성이란 중국사회와 정치체제를 잘 이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가능한 것임
- 한국 정부는 현재 국제질서의 구조를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도전이라는 패권경쟁의 구도로 인식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맞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임. 또한,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확보하고 나가야 동북아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발생한 문제를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중국과의 접촉방식으로 해결하려다 정확한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단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임기응변적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한중관계의 여러 문제와 사건은 사안별 자료가 정리되어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한중관계 문제 해결 데이터로 정리되어 활용되었다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한중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다시, 이러한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호전되고 건설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나 지도부의 노력 외에 양국 언론의 작용이 중요할 것이나 과거 양안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나 중일관계를 보면 양국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 중국에는 반일감정 이상으로 반한감정이 높아진 상태이기에 중국인들이 정서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것이 민심으로 반영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함
-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더 많은 항공모함을 유지하며 해양에 진출하여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강대국이 되려 하는데,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포와 우리나라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언젠가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양국 정부 관계가 원만 할 때 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맺어두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의제와 지역에 대한 국제법과 국가 외교력에 근거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중국과 협상을 통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주석

\* 본 내용은 저자가 중국과 홍콩, 대만 및 세계 화교권 지역을 오랜 기간 답사하며 채득한 중국을 이해하는 틀과 방법 그 내용을 인문학연구와 국제정치연구라는 경험에 의거해 서술한 내용으로 그 자체가 진위를 증명하는 논증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분석이기에 독자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단지 참조내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앞으로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고 정부는 어떻게 한중관계를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니 이 또한 참고사항으로 여기면 좋겠다. 또한, 혹시 중국인들이 이 문장을 읽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중국과 한중관계의 분석은 개인적 분석에 의존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한중관계를 위한 제언이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글이 작성된 시기는 2017년 10월초이기에 시점적 문제는 일부 보안하였다.

- 1) 1983년 대만을 시작으로, 1985년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1989년부터 중국을 돌아오면서 본 당시의 중국 내부와 중국과 인접된 지역을 보면, 중국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국과 인접지역의 관계에서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은 중국이 모두 우세한 상황이다.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기까지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일부 동남아 국가들까지 경제상황이 중국 보다는 앞서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이 중국과 인접한 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국과 가까이 있는 국가나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중국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면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외에도 중국적인 그 어떤 힘이 다시 중국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 2) 한국이라는 민주사회에는 여러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중국에 대한 의견도 서로 차이가 나며, 특히 같이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실제적인 사회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통계로 작성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인적 의견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부분에도 양해를 구한다.

- 3) 중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국가상황이 서로 다르다(國情不同)’는 중국의 국가체제와 정치 및 통치체제가 다른 나라와 달라 그에 의해 형성된 사회제도나 현상이 특이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중국사회를 특징짓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즉,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외국과 다르게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4) 오랜 기간 중국인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한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쌍방이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상대방 문화와 언어습관 그리고 그 체제 내에서의 표현 및 전달방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고위직 요원으로 공산당에 의해 배양된 인재들이다. 이들은 공산당의 기본적인 조직 관리와 생활과 언어표현에서 긴밀성, 은밀성, 절제와 보안에 신경을 쓰기에 이들의 언어표현과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교육과 그들의 행위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 6) 이는 중국사회가 공산당의 통치에 따라 모든 행정과 사회, 문화가 국수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수주의와 중화주의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상 차이일 수 있으나, 중국(문화)에 대한 과다한 집착이나 사랑이 국수주의로 변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중화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이 사회주의이지만 서구에 비해 정치를 제외하고는 문화·사회적으로 편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비교정치학적 이해보다는 한 지역연구에 몰입하거나 그 지역 생활에 적응되어 한 지역에 대한 인지능력이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나 이해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현상으로 생성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러한 사람들이 대만이나 기타 지역의 중국인(세계 화교)들과 소통할 때도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에서 중화사상적 사고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좀 더 넓은 시야로 미국, 일본 및 다른 나라와 체제와 중국을 비교할 수 있다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일반적으로 한 지역 언어와 지역연구에 몰입하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가하여 다른 지역을 배타적으로 보는 사고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반중 정서도 증가했다고 본다.

#### 참고문헌

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정세보고』. 국립외교안보연구소, 2017.

Ikenberry, G. John, and Michael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Shambaugh, David. *China goes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_\_\_\_\_. *Power Shi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Shambaugh, David, and Michael Yahuda.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8.

- 霍学伟. 『中国人的关系原理—时空秩序、生活欲念及其流变』. 北京大学出版社, 2011.  
 \_\_\_\_\_. 『人情、面子与权力的再生产』. 北京大学出版社, 2013.  
 \_\_\_\_\_. 『中国人脸面管—形式主义的心理动因与社会表征』. 北京大学出版社, 2014.  
 喬鍵、潘乃毅. 『中國人的觀念與行爲』. 麗文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8.  
 吕超. 『中国周边外交与东北亚去区域合作』. 万卷出版公司, 2011.  
 蕭新煌、文崇一. 『中國人—觀念和行爲』. 巨流圖書公司, 2010.  
 楊國樞. 『中國人的價值觀—社會科學觀點』. 桂冠圖書公司, 1993.  
 于建嶸等人. 『中國大呼吸—十大學者論國家戰略與民族使命』. 晨鍾書局, 2009.  
 朱建军. 『中国的人心与文化』. 山西人民出版社, 2008.  
 朱锋. 『国际关系理论与东亚安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中共中央党史研究室. 『中国共产党历史—第一卷、第二卷』. 中国党史出版社, 2011.  
 彭邁克. 『難以捉摸的中國人』. 牛津大學出版社, 1993.  
 洪向华. 『复兴之路—中国崛起的30个历史关键』. 青島出版社, 2007.  
 黄大慧. 『构建和谐东亚—中日韩关系与东亚未来』. 社会科学文学出版社, 2009.

#### ◆ 저자 약력

##### ■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홍콩 亞洲週刊 특약기자, 한국 亞洲經濟 중국전문대 기자 겸 아세아중국어연구소 소장.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콩 중문대학과 마카오 동아대학(MMS)을 거쳐 홍콩 주해대학(珠海大學) 중국문사연구소에서 王爾敏 교수의 지도 아래 “과도기 홍콩의 변화(1940~1989년)”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趙寶煦 교수의 지도로 “냉전 후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환경을 향한 한국외교”로 199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중심의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LG건설 대만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만(중화민국)한국연구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2003년 단국대학교로 부임하였음.

## 목 차

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
  - 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갈등
  - 나. 악화된 한일관계
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 가. 시기별 특징
  - 나.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일관계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1. 2017년 동아시아 정세와 악화된 한일관계

### 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 갈등

- 2010년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면서, 미중 양극체제가 본격화함. 미중 관계는 냉전기 미소관계와는 달리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협력과 갈등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 힘을 통해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또 북한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을 배경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음.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됨
- 2017년 동아시아는 기업가 마인드를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 제17차 당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고 ‘신시대 중국’ 건설을 내세우는 제2기 시진핑 체제, ‘국난극복’을 내세우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한 제4차 아베 내각 등과 같이, 주요 국가들에서 현실주의적 외교를 공공연히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연이어 탄생했음.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동아시아정세는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질 것임

### 나. 악화된 한일관계

-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물론 한국과 일본은 냉전기에도, 탈냉전기(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경제·안보적 차원의 협력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왔음. 그러나 2010년대 특히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는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경제·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않음

-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양자관계의 상대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요 고리이기도 함. 따라서 일본과의 장기적인 관계악화는 한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 확보가 어렵게 됨. 또 한미일 연대가 불안정하게 되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국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이상과 같은 관점에 입각해, 본 글은 박근혜 정부-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 시기를 주요 분석기로 택해 먼저 중군위안부로 상징하는 역사 문제에 더해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대립을 일층 고조시킨 요인이었음을 설명함.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일관계 수립을 위한 한국의 대일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양자관계의  
상대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요 고리이기도 함*

## 2. 한일관계의 특징과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 가. 시기별 특징

-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래 현재까지의 약 50년간 한일관계는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제1시기(1965~1989년)는 냉전체제하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안보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이 우선시되던 이른바, 65년 체제기임. 제2시기(1990~2000년대)는 냉전의 붕괴에 따라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도 양국 간에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이 유지되었던 시기임. 제3시기인 2010년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역사 문제에서 발화된 갈등이 타 현안으로 확대되어 가고, 정부 간 대립이 국민들 간의 감정악화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
- 제1시기(1965~1989년)
  - 한일관계는 대공산권 봉쇄를 목적으로 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안에서 이루어졌음. 때때로 발생하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공통적으로 양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일본은 한국이 행하는 반공의 방패역할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경제협력을 행했음.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60년대의 박정희 정권과 이케다(池田)·사토(佐藤) 내각 및 1980년대 전두환 정권과 나카소네(中曾根) 내각이 발휘한 ‘안보 우선형’ 이니셔티브임

*2010년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역사 문제에서  
발화된 갈등이  
타 현안으로  
확대되어가고,  
정부 간 대립이  
국민들 간의  
감정악화로까지  
비화되는 가운데,  
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

**종군위안부로****대표되는****과거사 문제를****둘러싼 대립이****대중정책을 둘러싼****대립으로,****정부 차원의 대립이****국민적 차원의****대립으로 확대**

## ○ 제2시기(1990~2009년)

- 1990년대: 냉전의 붕괴에 의해 반공연대의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 과거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원조국가 대 피원조국가라는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양국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음.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98년 김대중 정권과 오부치 내각의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임
- 2000년대: 양국은 국내 정치의 민족주의화로 인해, 특히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에 의해 과거사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패턴으로 대립을 반복했음. 그러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일 삼각관계 안에서의 연대는 중시되었음. 즉 양국 간에는 나쁜 경제·안보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유지되고 있었음

## ○ 제3시기(2010년대)

- 종군위안부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대중정책을 둘러싼 대립으로, 정부 차원의 대립이 국민적 차원의 대립(한국에서는 반일, 일본에서는 혐한)으로 확대되었음. 양국 모두 관계악화의 원인을 상대 국가에게로 돌리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움직임조차 시도하지 않음

**나. 박근혜 정권-아베 내각 시기**

## ○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한일관계는 종군위안부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악화되어 있었음. 2011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으며, 이에 연이은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2012년 12월)과 천황사죄발언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임
- 박근혜 정부 등장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개선이 기대되었음. 김영삼 정부 말기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양국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등장에 의해, 또 노무현 정부 말기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의해 해소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단으로 온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의 침략정당화 발언,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서의 응수발언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습니다”는 한일관계가 2000년대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음. 박 대통령은 역사 문제의 해결을 양국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음. 한편 아베 총리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부인하는 등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어 감

○ 대중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의 확대

- 박근혜 정부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일 G2시대가 도래했으며,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간의 파워전이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함. 따라서 한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임. 2013년 5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신뢰외교를 추진함. 이를 위해 국정과제 127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협력을 확대, 국정과제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추구한다”였음<sup>1)</sup>
-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음.<sup>2)</sup> 성명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협력의 분야를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로 대폭 발전시켜 나가고, 협력의 범위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까지 이룬다고 강조했다. 이를 상징한 것이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승 60주년 기념식에의 참석이었음
- 2015년 외교부는 역대 최상의 한·미 및 한·중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들 관계가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양자간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였음. 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한다고 제시했음. 그리고 한국이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 간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욕을 표명했음<sup>3)</sup>
- 한편 일본에서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수립되었음. 아베는 총리소신표명연설(2013년 1월)에서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해·영공 및 주권에 대한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재산,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지키고, 상처받은 일본외교를 재건해 세계에서 확고한 (일본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발언함
- 다음 해인 2014년 1월 발표된 일본의 종합적인 안전보장 전략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 관하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 행위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대두와 다양한 영역에의 적극적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아베 총리는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부인하는 등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되어 감**

**양국 국민들의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었음.  
한국 국민의 경우는  
합의를 평가하지  
않는다가 54%로  
평가한다(26%)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과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제시함. 그리고 안전보장 확보 방침으로 우선 일본 자신의 능력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각국과의 관계강화를 확대·심화시켜나간다고 제시했음.<sup>4)</sup> 이처럼 아베 내각의 대중정책은 '대중위협론'에 근거하여 협력보다는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 그리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이 일본의 대중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음

- 따라서 아베 내각은 한국 정부의 중국중시정책을 '반일'정책으로, 과거 사반성 요구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문제의 제기라기보다는 '반일 친중'정책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확보로 받아들였음. 따라서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하고자 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 2014년 5월 아베 내각은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시하고, 북한과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하는 등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카드를 사용하고자 했음
- 2015년 2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의 '한일파트너십선언' 이래 사용되어 왔던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언급했음. 일본의 위협인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추진하는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임

○ '12.28 위안부합의,' 그리고 양국 국민 간 갈등의 심화

- 한일관계의 악화가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5년 11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되었음. 북한의 핵 문제로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에 더해 군사적으로도 대국화를 모색하는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한미일 연대강화의 일환이었음. 그리고 다음달 12월 28일 '한일위안부합의문'이 발표되었음.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에 해당하는 해였음. 이로써 한일 정부 간 대립은 일단 표면적으로 진정되었음
- 그러나 양국 국민들의 '위안부합의'에 대한 평가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었음. 한국 국민의 경우는 합의를 평가하지 않는다가 54%로 평가한다(26%)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과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반면, 일본 국민의 경우는 합의를 평가한다가 63%로 평가하지 않는다(19%)보다 3배 이상 많았음. 그리고 이들은 위안부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음<sup>5)</sup>
- '위안부합의' 1년 뒤인 2016년 7월에 행해진 「제4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5년(72.5%)보다 줄어 61.0%로 나타났음. 한편,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일본인도 2015년(52.4%)보다 줄어 44.6%를 기록했음.<sup>6)</sup> 또 2017년 7월 동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56.1%로 2016년(61.0%)보다 4.9% 줄었음.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48.6%로 2016년(44.6%)보다 오히려 4%가 증가했음. 양국민의 상대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래의 한일관계 전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60% 정도가 동일하게 양국관계가 현재와 같거나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음<sup>7)</sup>

### 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 미중 신형대국관계,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세력전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름. 한국은 중견국으로 이를 목격하는 입장이나, 지역 강대국인 일본은 중국과 직접 세력전이를 겪고 있는 당사자임. 또 중국에 대한 국익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다름.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경제 면뿐만 아니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함.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라기보다는 경제와 안보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 정책을 실시함. 그러나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일본이 만들고 유지해 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국임. 따라서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바로 박근혜 정부-아베 내각 시기였음. 한국이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일본보다 중시하게 되었는데 반해, 일본은 중국위협을 전제로 실시하는 대중견제정책에의 한국의 동참이 필요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온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켰던 경제·안보협력 메커니즘이 무력화되었음
-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파워전이를 일본이 인정할 때까지 중국과 일본의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대중정책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우호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일본은 그 위상과 잠재력 면에서 여전히 세계 강대국의 하나이며 아시아의 지역강국임. 또 인접국가일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민주주

**한국이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일본보다 중시하게 되었는데 반해, 일본은 중국위협을 전제로 실시하는 대중견제정책에의 한국의 동참이 필요했기 때문**

의, 시장경제,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임. 따라서 한중관계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사 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부상하는 것도 관리해야 함.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안정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주석

- 1)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하에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기반 구축),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p.11.
- 2)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2013년 6월 27일, 베이징)>, www.yonhapnews.co.kr/.../2013/06/27/0200000000AKR20130627209800001.HTML
- 3) 외교부, “통일 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2015년 외교부 연두업무보고(통일준비 부문 합동 업무보고),” 2015.1.9, <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
- 4)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平成25年12月17日), 国家安全保障會議決定閣議決定. [http://www.mofa.go.jp/mofaj/fp/nsp/page1w\\_000095.html](http://www.mofa.go.jp/mofaj/fp/nsp/page1w_000095.html)
- 5) 한국: 한국갤럽 「2016년 1월 8일 조사 결과」, 일본: 朝日新聞 「2016년 1월 19일 조사 결과」.
- 6)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 「2016년 제4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https://www.eai.or.kr/type\\_k/panelView.asp?code](https://www.eai.or.kr/type_k/panelView.asp?code)
- 7)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동아시아연구원, 「2017년 제5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7072115484780.pdf](https://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7072115484780.pdf)

#### ❖ 저자 약력

##### ■ 신정화

現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일본외교정치, 북일관계, 한일관계를 전공하고, 일본 慶應義塾大学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음. 북한연구학회 부회장이며,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현대일본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함.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의 대북정책(1945~1992년)』(200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공저, 2012), 『일본민주당정권의 탄생과 붕괴: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4),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공저, 2015), “동북아 안보구도와 한일관계: 아베내각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발전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과거사문제에 대한 한국 역대정권의 대응: 관리에서 주도로” 등 다수.

# 동아시아 ·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1. 머리말

- 2017년 현재의 세계질서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이며,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세계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금년 1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변화 협정 탈퇴, TPP 폐기,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유네스코 탈퇴 등 이전과는 다른 대외정책의 모습이 나타남
  - 이 밖에 브렉시트(Brexit)의 진행, 유럽권에서 극우세력의 확장,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위기의 지속, 유럽에서의 각종 테러 발생, IS의 퇴각 등도 전개되고 있음
  - 유라시아 및 동아시아와 연계된 한반도 안보정세 역시 ‘초불확실성’의 연장선에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연이은 핵 · 미사일 도발과 함께 역내 안보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은 ‘북한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며, 이의 해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한편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음
  -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 · 러, 중 · 러 관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미 의회가 통과시키고 8월 2일 발효된 ‘러시아, 이란, 북한 관련 제재법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미 외교관 755명 추방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표출함
  - 당분간 미러관계는 미 대선에서의 러시아 커백션 이슈, 미 의회의 對러

## 목 차

1. 머리말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러관계 동향
  - 가. 신푸틴독트린과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 가. 대(對)한반도정책 기조와 목표
  - 나. 북한 핵 · 미사일 관련 정책적 입장과 특징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 · 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 · 러, 중 · 러관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는****미국에 대한****라이벌 인식과****세계질서 주도국 인식,****‘강국으로 부활한****러시아’ 입장에서****대국주의(大國主義),****실용적 전방위****강대국 외교노선을****전개하고 있음**

불신 지속, 중·러 군사협력과 북핵 관련 공조 등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반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최근 들어 북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됨
  -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인터뷰 형식(6.27) 빌어 북핵·미사일 해법을 제시하고, 중·러 정상회담(7.4) 계기로 쌍중단, 쌍궤병행의 해법에 동조·공론화하는 등 중·러 정책 공조로 대응하고 있음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초기부터 직접 가담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으며, 부르미스트로프 6자회담 차석대표와 최섉희 미주국장 간 회동,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화 자리 마련 등 중재자적 역할을 탐색하고 있음
- 현재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역내 안보질서 재편과 함께 미래 안정과 평화,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변곡점에 놓여 있음
  - 비록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창조적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진력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글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에 주목하면서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래관계 동향, 동아시아·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나아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입장을 분석·평가하고, 한·러 간 정책 공조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2.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미래관계 동향

### 가. 신푸틴독트린과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

- 러시아는 북유럽에서 중앙아, 극동으로까지 연결된 광활한 영토로 인해 기본적으로 세계전략을 구사하며, 미국에 대한 라이벌 인식과 세계질서 주도국 인식, ‘강국으로 부활한 러시아’ 입장에서 대국주의(大國主義),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외교노선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세계는 지금 다극화와 다극질서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자주의 해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BRICS, SCO, CSTO, CICA, APEC, EAS, ASEAN을 활용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
  - 특히 2014년 3월 크림병합 이후에는 국내 애국주의 열풍을 활용한 가운데

‘신(新)푸틴독트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갈

- 신푸틴독트린은 △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의 절대 사수, △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미국과 서방 측의 책임이 존재, △ 다극질서하 러시아의 역할 제고, △ 국가 주권에 입각한 국제법 준수와 내정불간섭 원칙 강조, △ 핵무기 포함 口강력한 국방력 강화 등이 핵심을 이룸<sup>1)</sup>
-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병합 이후 군사안보 문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신군사독트린을 비롯해 해양독트린(2015.7), 국가안보개념(2015.12), 대외정책 개념(2016.11), 2030 경제안보전략(2017.5) 등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고 있음(www.scrf.ru)

**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

-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을 받음
  -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 짓는 바로 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임<sup>2)</sup>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됨
  - 푸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에의 친(親)러 인사 배치 등으로 미러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미 대선에의 러시아 커넥션 조사, 미 의회의 대러 제재 지속 등으로 답보 내지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 푸틴 정부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은 러시아의 세계전략 연장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미(對美) 인식, 외교안보 진용의 정책 방향, 미·러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정책 우선순위 향배와 연계되어 있음
- 러시아는 이미 2009년 7월에 성안한 ‘국가안보전략 2020’에서 미국을 ‘라이벌’로 설정한 바 있으며, 군사안보적 전략 균형은 물론 MD 구축, 핵무기 감축, 국제테러리즘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다극체제, 다자주의, 집단적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를 창출하고자

*푸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진영에의  
친(親)러 인사 배치  
등으로 미러관계  
개선에 기대를  
가졌으나,  
미 대선에의  
러시아 커넥션 조사,  
미 의회의 대러  
제재 지속 등으로  
답보 내지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종합적으로****러시아의 대미(對美)****인식과 이해의****기저에는 견제자 및****글로벌 현안에서의****비판적 조력자의****성격이 깔려 있으며,****실질적으로****러시아는****대내 문제에서의****간섭 금지,****유엔 현장 강조,****국제법적 규범 준수****등을 강조****노력함**

- 미국에 대한 견제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있으며, BRICS 정상회의의 정례화, 유엔의 역할과 활동 강화 지원, SCO, CSTO, EurAsEC을 비롯한 지역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도 국제질서 다극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음

○ 러시아는 무역, 투자, 과학기술 등의 부문에서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입장이며, 또한 글로벌 전략 안정과 국제안보를 다루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즉 국제테러리즘, 마약 퇴치, 기후변환 대처 등 글로벌 사안은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반면, 유럽 MD구축 문제, 시리아 사태 및 북한 핵 문제에의 군사적 개입 등에는 반대하며 독자적 목소리를 표출

-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 내 反정부, 反푸틴 시위와 관련해 그 배후에 미국이 사주하였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기본적으로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 견제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특히 군사안보 측면에서 MD 구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대미(對美) 전략적 대립각을 취하고 있는 상황

- 미러관계에 대해서도 양자 정치대화, 협력이 강력한 경제협력의 토대 위에서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러시아의 대미(對美) 인식과 이해의 기저에는 견제자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비판적 조력자의 성격이 깔려 있으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대내 문제에서의 간섭 금지, 유엔 현장 강조, 국제법적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와 불편한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음

○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러시아는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발언에 기대감을 가지는 한편 우려와 경계감도 동시에 표출함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축전을 보내는 등 발 빠르고 우호적인 행보를 시현

-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는 전형적 정치인들과 달리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으로 평가(6.1)

- 반면,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취임 이후 “크렘린궁은 트럼프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표명, 신중한 태도를 표출

- 안드레이 페도로프 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푸틴 대통령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NBC 방송, 2.20)

- 또한 트럼프의 2~3개월 동안의 언행을 참조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얇은 얼음 위에서 춤추고 있으며, ‘순진한 모험가(risk-taker who can be naive)’인 것으로 묘사하는 등 트럼프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연합뉴스, NBC 방송, 2.20)
  -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RISS)를 비롯한 여타 러시아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 한편으로는 관계 개선의 기대를 하면서도 시기상조 내지 갈등 지속이라는 혼재된 전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음(www.riss.ru, www.russiacouncil.ru, www.imemo.ru, www.carnegie.ru)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첫째, 트럼프의 푸틴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친(親)러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러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 의회의 반러 정서와 강경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미 의회 내 반(反)러 정서 및 제재 결의안 등 정책 시스템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표명했던 것과 달리 NATO, EU에 대한 정책 변화를 나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침
  - 셋째, 미러관계 추이는 초기에는 러시아가 대러 제재 완화 내지 폐기 등 양국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 의회의 대선 관련 청문회 개최 및 조사 진행, 대러 추가 제재 결의 등으로 인해 점차 대미 신뢰가 저하되고 양국 간 갈등이 커져가는 모습을 나타냄
  - 넷째, 상호 불신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영역, 극지방 연구와 우주정거장을 활용한 양국의 우주 탐구 협력이 유지되는 등 제한적 협력관계도 지속됨. 일례로 워싱턴 D.C.의 러시아 문화센터는 2017년 6월 20일 2차 세계대전 중 실종된 미군과 소련군에 관한 양국의 공동 조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
  - 다섯째, 미·일 대(對) 중·러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미·러 간 대립 확대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 강화 등 군사적 측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러는 대미 견제의 일환으로 금년 7월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군사훈련(‘해상연습-2017’)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 오호츠크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
  - 여섯째,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는 인식의 공유 속에 상호 친밀감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국제테러 대처 등 국제안보 현안에는 일정 정도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미·일 대(對)  
중·러의 동아시아  
질서 구도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미·러 간 대립 확대는  
중·러의 합동 군사  
훈련 강화 등  
군사적 측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역내 안보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

- 끝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비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파장, 북핵·미사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향후 △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해결 여부, △ 미국을 위시한 서방 측의 대리 제재 향배, △ 이란 핵 합의 불인증 향배, △ 시리아 내전 상황의 휴전 내지 종료, △ NATO 동진과 유럽 MD 구축, △ IS 등 국제테러에 대한 공조 등이 미·러관계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3.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정책적 입장

#### 가. 대(對)한반도정책 기초와 목표

-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 △ 한반도 비핵화,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저지, △ 남북한의 친러시아적 접근 도모, △ 6자회담 재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유로-태평양국가’로서 아태지역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한반도에서의 에너지, 교통 인프라 및 물류, 식량 안보, 해양자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또한 러시아는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對)남북한 균형접근 및 등거리 정책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러시아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와 연계되어 있음
-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한반도의 문제를 세계 질서,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에 대응하는 다른 축으로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 둘째, 역내 안보현안의 당사자로서 소외·배제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NPT체제 유지 및 한반도 비핵화의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넷째, 러시아는 남북한 균형접근,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루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섯째, 전략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긴장을 우려하고,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존재감과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고 함
- 여섯째, 북한 핵실험의 후속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내용 면에서 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되는 것에는 중국과 공조해 반대함. 또한 자국의 경제적 실익과 연계된 사안은 초안 변경을 통해 관철하는 등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끝으로, 신동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극동시베리아 개발의 성공을 통해 중국의 중앙아, 극동지역 영향력 확대와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남북을 함께 엮는 남·북·러 3각 경협을 성사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 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책적 입장과 특징

- 푸틴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푸틴 대통령이 2012년 2월 『모스크보브스키에 노보스티(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에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Россия и меняющийся мир)’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힌 내용에 담겨져 있음
  -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둘째,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함
  - 셋째,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통해야 하며, 6자회담의 즉각적 재개가 요구됨
  - 넷째, 한반도 현안 당사자들 간 접근에 차이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거친 대응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북한 신지도부에 대해 체제 견고성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됨
  - 다섯째, 북·러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이며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대화를 활발히 해나갈 것임
  - 여섯째, 북한과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평양이 핵 포기를 결정하도록 할 것임
  - 일곱째, 한반도에서 상호신뢰가 강화되면 남북한 간 대화도 다시 새로 위질 것이 자명함
  - 이는 푸틴 정부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입장을

**전략적 중간자의  
입장에서 남북 간  
대립·긴장을  
우려하고,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존재감과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고 함**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9.5)  
“북한인들은  
(체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복원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고 언급**

**금년 들어  
북 핵·미사일 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러시아 나름의  
로드맵 제시 등  
다소 적극적 자세로  
변화된 모습**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속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sup>3)</sup>

- 최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9.5) “북한인들은 (체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을 복원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푸틴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 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sup>4)</sup>

○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먼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태를 악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거의 같은 논조로 유관국들의 자제를 촉구하여 왔음

- 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남북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러시아 나름대로 긴장고조와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균형적 중재자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됨

- 그렇지만 북핵 문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하지 않고 있음.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에의 개입, 미러관계 향배, 서방의 대러 제재 등에 더욱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

- 이에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소극적, 관망적 자세를 나타내었음

- 이의 연장선에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의 재개, 외교적·평화적 해법 강조 등 원론적인 주장을 지속 견지하였으며, 자신의 독자적 해법 제시보다는 중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경향을 띠었음

○ 반면 금년 들어 북 핵·미사일 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러시아 나름의 로드맵 제시 등 다소 적극적 자세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됨  
- 지난 6월 27일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은 3단계 접근의 북핵 문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특임대사가 방북해 이선희 미주국장과 회동하고 모스크바 비핵화회의 개최, 모로조프 국가두마 의원 방북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중재 역할을 탐색함

-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4일 독일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6개항 가운데 제1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한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일종의 북핵 로드맵을 제시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중앙일보, 2017.7.6) 주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 ⇒ 협상 개시 ⇒ 무력불사용, 불침략, 평화공존을 포함한 총체적 원칙 확정 ⇒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괄타결의 순서로 되어 있음
  - 여기의 일괄타결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체제를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관련국(미북)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
  - 크게 보아서는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並行, 북한 핵 포기과 북미 간 평화협정 동시 추진)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양국 정상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음
  - 즉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효율적 해결 방안은 ‘대화와 협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과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화성-12호, 화성-14형 발사로 인해 고조된 미국의 對북 제재와 압박 강화 국면과 맞물려 어떤 경로를 밟아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음
- 현재 북핵·미사일 문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아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짐
  -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북중관계가 소원한 상태로 변모함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에로의 접근 정도와 필요성도 더욱 커진 상황임
  -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동북 3성의 발전되어 가는 상황을 지정학적·지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도 높아짐
  -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 남·북·러 3각 경협의 실천 환경도 이전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발전에 부합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전략적 대차대조표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임

**푸틴 대통령은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  
남·북·러  
3각 경협의  
실천 환경도  
이전에 비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음**

**문재인 정부****출범에 대해****러시아 푸틴 정부는****기대감을 갖고 있으며,****한국 신정부 역시****러시아의 중요성을****잘 알고 있는 가운데****북핵 문제뿐만 아니라****역내 평화와 번영을****위한 동반자로서****커다란 역할을 해주길****기대하고 있음도****좋은 여건**

- 동아시아·한반도 정세는 미·일·중·러 역내 유관 국가 모두 안정과 평화, 번영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토대로 각국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아울러 갈등과 견제, 경쟁이라는 요소도 담겨져 있는 등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제질서 구도 축, 유관국 간 삼자·양자관계 구도가 서로 얽혀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임
- 주지하는 바처럼 현재 당면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있음
  -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과 WMD 비확산, NPT 체제 유지 등 국제법과 국제규율을 준수하는 데서 비롯됨
  -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남 도발을 멈추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적 고립 상태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긴요함
  - 불량국가, 공포정치, 인권탄압, 세습왕조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쿠바, 베트남, 미얀마,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 개혁·개방, 국제규율 준수의 자세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 관건임

**4. 맺음말: 정책적 고려사항**

- 한·러 간 협력 방안으로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 푸틴 정부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대화를 통한 외교적·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단계적·포괄적 해법 등은 상호 의견 일치를 보는 부문임
  -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 러시아 푸틴 정부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한국 신정부 역시 러시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음도 좋은 여건임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러시아는 국제질서 재편의 측면에서 보아 미·중 사이에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데 일조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역내 정책 목표로서 제시된 ‘유라시아권 동서 전략적 균형 도모’와 ‘세력균형의 유라시아 연대망 구축’을 잘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러시아는 역내 안보 현안의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러시아는 당사자로 참여함은 물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북핵 문제 해결에의 중재, 조정 역할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며, 북한 개혁·개방에의 긍정적 영향 제공, 통일한국에의 후원자 등 바람직한 효과의 측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도 보다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러시아로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 소통 채널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이미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신정부의 대러 특사단 방문 시 대북 특사 파견 의향이 있음도 밝힌 것으로 알려짐 (KBS 뉴스, 2017.5.26)
  - 반면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독일 뢰르버 재단 연설에서(7.13) “북한이 러시아의 가까운 이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아무런 특별한 채널이 없다. 북한의 새 지도자가 만든 관례를 볼 때 어떤 나라도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채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연합뉴스, 2017.7.14)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자, 세력균형자, 건설적 중재자, 한반도 평화체제 보강자 등의 제반 역할을 충실히 잘 실천해 나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긴요함
- 한편, 금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 한·러 정상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 한·러 양자 수준에서의 극동지역 개발 참여와 실질 협력 기반 마련, △ 新북방정책과 新동방정책 간 정책적 정합성 및 협력 인식 공유, △ 남·북·러 3각 경협 미래 비전과 중장기적 추진 의지 제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원유공급 중단 요구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對러 설득에의 한계점도 노정
  - 추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기(既)체결된 MOU의 성실한 이행과 추진 점검, △ 신동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유라시아 협력의 연결성, 정합성

**푸틴 대통령은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고  
천명**

활용,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충실한 활동, △ 한국-유라시아경제 연합(EAEU) 간 FTA 체결 준비 만전 등이 긴요함

## 우리로서는

### 미·중·러

### 3각관계 향배 및

### 미·중, 미·러,

### 중·러관계 변화에

### 유념하면서,

### 한·미, 한·러,

### 한·중 등

### 양자 협력관계 강화와

### 1.5 트랙의

### 전략 소통 채널

### 활성화가 바람직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러관계 향배는 현실적으로 한러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갈등의 진행은 동조화 현상으로 발현되어 한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러관계와 한러관계 간 탈(脫)동조화 노력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對러 제재 여파,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북핵 중재안에 대한 이견 등 한·러 간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미국의 對러 제재 향배와 파급영향 분석 및 한·러 경협에의 부정적 파급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조건부 사드 배치론’ 등 對러 설득 논리 마련 및 외교적 대응 강화, 러시아의 3단계 해법과 쌍중단, 쌍궤병행에의 동조·편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도 필요함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미·중·러 3각관계는 미·중의 G2체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12년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등장 이후 △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병합, △ 이란 핵협상 타결, △ 시리아 내전에의 개입, △ 브렉시트 여파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축(軸)으로 부각됨
  - 미·중·러 삼각구도 속 미·중, 미·러, 중·러 양자관계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세력균형의 도모와 세력전이를 둘러싼 자국 국익 극대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위치함
  - 또한 트럼프, 푸틴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아베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의 스트롱맨(Strongman) 리더십과 더불어 향후 4~5년 정도의 집권 안정기가 이뤄질 예정임
  - 우리로서는 미·중·러 3각관계 향배 및 미·중, 미·러, 중·러관계 변화에 유념하면서, 한·미, 한·러, 한·중 등 양자 협력관계 강화와 1.5 트랙의 전략 소통 채널 활성화가 바람직함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는 역내 존재하는 한·미·중, 미·중·러, 한·미·러, 한·미·일 등 다양한 소다자 구도 속에서의 러시아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소다자 구도가 협력의 틀과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 의제 발굴과 네트워크화가 긴요함
  - 이를테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남·북·러 3자가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GTI의 활성화, 한·중·러, 한·러·일 소다자 협력 토대

위에 북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나가고, 국제규율,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교의 활성화

- 한러대화(KRD), 한러포럼,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을 비롯해 1.5 트랙의 전략 대화 재개,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간 전략 대화 정례화 등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함
- 또한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해 양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가 중요하며, 역사·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러시아에 대한 공공외교 활성화가 바람직함

○ 한·러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포함해 사활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 비전을 가꾸고 공동이해를 극대화시켜 나갈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미래 한·러 간 협력 비전의 방향은 지난 27년에 걸쳐 이루지 못한 미완의 잠재력이 완성된 상태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러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긴요함
- 특히 2018년은 한·러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 6월 FIFA 러시아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음. 아울러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스포츠·평화 행사가 잇달아 개최될 예정임
- 역내 국가 모두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상징적 대장정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가 핵심적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커다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한·러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토 분쟁을 포함해  
사활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 비전을 가꾸고  
공동이해를  
극대화시켜 나갈  
여건을 갖추고 있음**

주석

- 1) 신헤트독트린 내용에 대해서는 장덕준, “‘신헤트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Eurasia FOCUS』(2015.1.26.) 참조.
- 2) 푸틴 집권기 미러관계에 대한 분석은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2014-01); 고재남,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7-04) 참조.
- 3) 고재남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인식을 미국책임론, 대북 제재 무용론, 우발적 전쟁발발과 재앙론, 동북아 핵확산 우려 및 군비경쟁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론, 남북러 3각 경험 장애론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과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17-

41), pp.3-6.

- 4) 이상준·서동주, “각국의 한반도 인식—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 「ISSUE BRIEF」(여시재)(2017-026).

#### 참고문헌

고재남. “러시아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과 대러 정책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2017-41).

\_\_\_\_\_.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러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2017-04).

김정기.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중소연구」 제40권 제1호(2016 봄).

서동주. “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2014-01).

신범식.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 정치: 지역 세력망구도 변화와 러시아의 가능성 및 한계.”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2014.8).

\_\_\_\_\_.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 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3).

이상준·서동주. “각국의 한반도 인식—러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인식과 입장.” 「ISSUE BRIEF」(여시재)(2017-026).

장덕준. “‘신푸틴독트린’과 러시아 대외정책의 향방.” 「Russia-Eurasia FOCUS」(2015.1.26).

러시아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russiancouncil.ru>).

러시아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imemo.ru/>).

러시아연방보안국 홈페이지(<http://scrf.gov.ru/>).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riss.ru/>).

카네기모스크바센터 홈페이지(<http://carnegie.ru/>).

KBS뉴스, 연합뉴스 외.

#### ❖ 저자 약력

##### ■ 서동주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국제관계연구센터장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국제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러시아 정치·외교, 한러/북러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이며, 최근 연구로 『러시아현대정당사』(저서, 2014)를 비롯해 “한·미·중 삼각구도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의미”(2016), “러시아 푸틴시기 정치체제 특징”(2013),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대러 대응 전략”(2012), “남·북·러 경제협력과 북러관계”(2012) 등이 있음.

## JPI정책포럼 현황

- 이성우 · 김진호 · 신정화 · 서동주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No.2017-3/4/5/7)
- 고상두 · 신범철 · 황지환 · 도종윤 『외교적 동반자관계와 한국외교』 (No.2016-07/08)
- 도종윤 · 한병진 · 이성우 · 한인택 『북한 정치의 동향과 대북정책의 평가』 (No.2016-02/05/09)
- 김진아 · 신종호 · 이성우 · 이무성 『미중관계와 한국 외교』 (No.2016-01/03/04)
- 이성우 · 이영훈 · 우평균 · 홍양호 『남북관계와 동북아협력』 (No.2015-15/16/17)
- 도종윤 · 김홍중 · 이승주 『지정학의 부활인가, 지역주의의 심화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아키텍처의 현황』 (No.2015-13/21/22)
- 이현미 · 고봉준 · 이성우 · 이수훈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 (No.2015-02/05/06)
- 이성우 · 이홍섭 · 김흥규 · 조세영 『주요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No.2015-01/03/04)
- Carolina G. Hernandez · 한인택 · 이재현 · 최진우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외교』 (No.2014-23/24/25)
- 도종윤 · 이수형 · 진창수 · 박영길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변국 관계』 (No.2014-20/21/22)
- 한인택 · 이주흠 · 이선진 『동북아 평화협력: 도전과 과제』 (No.2014-19/26)
- 홍석준 · 이재현 · 신재혁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호』 (No.2014-17/18)

- 니우린제(牛林杰)·윤태룡·장준영·이성우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협력』  
(No.2014-13/14/15)
- 서동주·유영철·고성윤 『국제질서의 개편과 전략적 선택』  
(No.2014-12/16)
- 조태열·진행남·정재욱·이성우 『신뢰외교 구축과 안보협력의 미래』  
(No.2014-09/10/11)
- 김태환·이신화·신범식·장노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No.2014-06/07/08)
- 이성우·이상현·전재성·진행남 『외교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  
(No.2014-03/04/05)
- 하인즈 가트너·서동주·허태회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  
특징과 전망』 (No.2014-01/02)
- 배금찬·경제희·이정우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No. 2013-17/18/19)
- 신각수·김성한·서창록·조정현·신부남 『한국외교의 방향과 현안』  
(No. 2013-13/14/15)
- 조양현·신정화·고봉준 『일본과 동북아 안보』 (No. 2013-9/16)
- 주철기·진행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 2013-11)
- 유현석·이성우·김성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No. 2013-10/12)
- 진행남·한인택·황일도 『북핵과 한반도 평화』 (No. 2013-06/07/08)
- 제성훈 『3기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결정요인, 평가, 전망』  
(No. 2013-05)

## Security Crisis on Korean Peninsula and ROK-U.S. Ties: A Conside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YI Seong-Woo (Chair of Conflict Resolu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The inauguration of the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has raised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that it would establish an East Asia polic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from the conventional policies of the Republican Party. Amid the anticipation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the basic li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een as based on its judgemen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failed to safeguard U.S. interests and check the rise of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hinted at strong measures to secure both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East Asia. It also indicated adamant posture against the nuclear arms and missile development by North Korea amid its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aggressive posture to resort to military response to the nuclear threats of the North amid the shift from neo-isolationism to U.S.-first policy posed a majo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t the same time, the U.S. demanded renegotiation on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o redress its trade deficit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FTA emerged as a major issue between Korea and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aggressively for renegotiation of its terms—the opposition of the American industrial sector notwithstanding—as to boost employment and productivit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challenged by many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implements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secondary boycot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hich requires the coope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Korea. For its part, Korea needs to regai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forces, establish “kill chain,”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as well as deploy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North Korea. It should also take joint steps with Japan and the U.S. after settling certain pending issues, such as the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 pact with Japan and comfort women.

---

## Hegemonic Rivalry in Northeast Asia and Reflections on Korean Diplomacy toward China

KIM Jin Ho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The cause of new disputes in Northeast Asia lies in the success of the Chinese policy of reform and door-opening and the Communist Party's resultant stronger grip on power and greater influence on politics (typified by Communist Party-based centralism), economy (reform and door-opening policies), military (with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society (Chinese type of socialist society) and culture (spiritual civilization befitting the Chinese socialist system). The campaig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o build up national power is based on stronger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Xi Jinping. Therefore, th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the “leadership core” (Communist party,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is expected to maintai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under the vision of Chinese dream (中國夢) for a longer term. Given the fact that the Chinese leadership actually preferred the strict unified order of the School of Law (法家) in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to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which used to govern social,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family systems,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Communist Party exerts far greater influence than any other social organizations over Chinese politic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Northeast Asia in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examine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foresee the changes in the bilateral ties. It is also aimed at exploring the fundamental tasks lying ahead of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seeking the solu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of dispute between academic groups and scholars of the two countries. For instance, it i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paper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y the Korea-Chinese ties matter, what elements affect the Korea-U.S. and Korea-China ties, and how do the inter-Korean relations influence the ROK-U.S. and Korea-China ti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the Korea-China ties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ties of the two countries, their divergent purposes and responses to the hegemonic rivalry of the world powers in the region.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s and the kind of efforts the involved parties have to make to reconcile the intrinsically problematic issues and improve their relation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stress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and ROK-U.S. ties, as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tend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ROK-U.S. The alliance constitutes the basics of South Korean diplomacy with the U.S. and China.

---

## Reorganization of East Asian Order and Korea-Japan Relations

SHIN Jung-wha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organized East Asian order in 2010s, the relations between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abinet of Shinzo Abe have worsened over the history issues and their China policies. The pattern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evading the historical disput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ies with Japan in 1965 has broken down.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history have subsided with the U.S.-brokered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 28, 2015.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accord, anti-Japanese and anti-Korean sentiments were rekindled in Korea and Japan,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comfort women issue still remaining wide apart. Yet more pertinent is the difference in their treatment of China that has emerged as a super pow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regarded the rise of China more as an opportunity for its economy and security than as a threat, and implemented hedging policy toward China. However, Japan perceived China as a threat and tried to check the rise of China with its self-help and balancing policies while asking Korea for cooperation on its China policy. The different postur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have weakened their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f South Korea needs Japanese cooperation for its national interests, it has to cope with the hedging dilemma of maintai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mid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S. When South Korea succeeds in doing so, it could win support from Japan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chieve peace.

##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ROK–Russian Relations:

### Towards Coopera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trategic Cooperation

SUH Dong Jo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Putin government of Russia is enlarging its presence in international affairs by intervening in the Syrian civil war and the negotiation process to end the war, and by performing a leading role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arms, after its annexation of Crimean peninsula in March, 2014. Russia has as its top priority the lifting of sanctions by the U.S. and the West on itself, whil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using its ties with the U.S. and Chin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January, 2017, attention was being paid to the future course of the U.S.-Russia relations which had been acutely worsen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China relations, the U.S.-Russia ties are the pivot of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also serve as a barometer of the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e key agenda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sture toward Russia; the personal ties of Trump and Putin; the hacking scandal involving the alleg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consequences on their ties; growing mistrust in each other; coexistence of the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hardline policy of the U.S. Congress toward Russia; tit-for-tat expulsion of diplomats; and Syrian civil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reg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utin government is seen as maintaining the position ① not to allow North Korea to possess nuclear arms ② to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③ to oppos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all for diplomatic solutions to the issue ④ demand unconditional reopening of the six-party talks and ⑤ agree with the measure to improve ties with the North to persuade its abandonment of nuclear arms.

Noteworthy is the more active move of the Putin government, deviating from the standoffish stance, to get itself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substantiate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to tide over the complicated security crisis on the peninsula. First, the two countries need to secure common ground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mind to not tolerate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seek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s. At the same time, Seoul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utilize the intermediary role of Russia over the nuclear issue; take measures to follow up on the ROK-Russia summit meeting in Vladivostok; decouple the ROK-Russia relations from the U.S.-Russia ones; take not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U.S.-China-Russia ties and activate the 1,5 track dialog channel; initiate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pand the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 with Russia; and activate public diplomacy toward Russia.

## 韩半岛安保危机与韩美关系： 考虑韩半岛非核化政策

李成宇 (济洲平和研究院 纠纷解决研究部长)

特朗普总统上台以后，人们既忧虑又期待重新复兴的美国保守政权的东亚政策，与奥巴马的民主党和通常的共和党政府政策会有出入。在美国对外政策基本原则会发生变化的前提下，特朗普行政部认为与奥巴马行政部针对东亚的政策没有保护到美国国家利益，也没有成功抑制到中国的复兴。美国为了同时确保东亚军事安保利益与经济利益将采取强硬措施。美国在东亚与中国形成对立格局，在北韩核开发与导弹发射试验威胁下准备采取强硬措施。特朗普总统就任初期，新孤立主义政策转向美国至上主义为原则，积极应对解决北韩核问题的军事手段成为威胁韩半岛的重要因素。美国为了改善与东亚同盟国家的贸易赤字，要求与韩国重新协商自由贸易协定。为了改善美国国内制造业生产与就业问题，强烈要求重新协商FTA。但是由于产业界的强烈反对，重新协商将长期成为韩美关系重要议题。加强韩美同盟有效协作达成韩半岛非核化，还需要完成很多重要课题。特朗普行政部为了实现北韩非核化，采取了包括新一轮制裁的整体制裁措施。文在寅政府需要与美国保持步调一致。作为应对北韩措施的一环，包括转换战时作战指挥权、布置萨德、形成韩国型导弹防御系统“杀伤链”系统，以及建造核潜艇等军事措施。为了有效应对北韩，需要通过解决韩日军情保护协定和包括“少女像”在内的慰安妇问题等韩日间悬案，促使韩美日步调一致。

## 东北亚霸权竞争与韩国对中外交反思

金珍鎬 (檀国大学 教授)

东北亚国际关系出现新的纠纷的因素有，中国改革开放政策的推进与成功，由此发生的中国共产党统治能力强化，以及对政治（以共产党政治理论为依据的中央集权制）、经济（改革开放政策）、军事（军事现代化）、社会（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社会）、文化（符合社会主义国家的精神文明建设）等国内外诸多方面的影响。同时中国政府能够以权威主义政府体制增强国力，是因为现在的习近平为核心的中国共产党中央的领导能力比任何时候都要强大，使得中国政府在“中国梦”的新时代下，能够展开并长期维持一带一路中国发展战略。过去中国的政治坚持儒教思想的家庭、社会、教育、行政秩序等，事实上在政治军事层面上提倡法家的统一和强大。而如今中国的政治与我们通常接触到的中国社会和经济不同，我们绝不能忽视组织性势力共产党的存在。本文站在韩半岛韩国的立场，考察东北亚国际政治局势，探讨韩中关系，展望韩中关系的未来。区分社会团体或者学者们对韩中关系的认识，在增强国家利益的对外关系中，考察改善韩中关系的根本课题与解决方法为目的。例如解答“为什么重视韩中关系？”、“为什么韩美关系会影响到韩中关系？南北韩关系对韩美关系和韩中关系会有什么影响？”等。文中提到的韩中关系的矛盾是指，随着韩中关系历史变化、两国国家体制差异与不同战略目标，导致两国在强国间势力竞争中呈现的不同反应与形象，以及不同的纠纷解决方法。主要考察发生纠纷的原因何在，为了解根本性问题应该怎样与相关国家中长期性地维持并发展国家间的关系等。最后如此重视南北韩关系及韩美关系特殊性与安保的重要性，与韩国国内政治状况有关，也与现阶段不得不重视韩美同盟重要性的国际政治现实有关。这是韩美、韩中关系中韩国对外政策的基本格局。

## 东北亚秩序重组与韩日关系

辛貞和 (東西大学 教授)

受到2010年代东亚秩序重组的影响, 朴槿惠政府-安倍晋三内阁在历史问题与对中政策方面关系逐渐恶化。打破了1965年邦交正常化以来历史纠纷被安保经济协力缓解的模式。2015年在美国的介入下, 两股的历史纠纷以“12.28慰安妇协议”告一段落。可是在这个过程中韩国的反日情绪和日本的厌韩情绪扩大, 两国在从军慰安妇问题上仍然找不到交集。更重要的是与复兴起来的大国-中国存在纠纷。韩国作为发展中国家, 并没有把中国当作威胁, 而当作经济和安保(对北韩的政策)的机会实施Hedging政策。可是日本作为地区性大国把中国当作威胁, 通过Self-help和Balancing政策牵制中国, 要求韩国的支援。这种对中政策的差异削减了两国间的安保经济协力的必要性。韩国为了国家利益需要日本, 处在身处“韩美同盟”及“韩美日三国安保协力结构”, 还要管理“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的Hedging dilemma中。只有管理好这种关系, 韩国才能确保日本的支援促进韩半岛非核化与和平。

## 东亚·韩半岛安保政局与韩俄关系:

### 共同解决北核问题, 加强战略协作

徐東周 (國家安保戰略研究院 高級研究員)

俄罗斯普京政府继2014年3月合并克里米亚半岛后, 军事介入叙利亚内战签署终战协定, 在伊朗核协商中起主导作用等, 在国际舞台逐渐扩大其影响力。俄罗斯外交安保的悬案中解除美国和西方国家的对俄制裁为首要部分, 北韩核导弹问题正在美俄、中俄关系的延长线上解决。

2017年1月美国特朗普行政部执政以来, 奥巴马行政部执政期间美俄间的矛盾受到关注。美俄关系与美中关系是世界政治经济秩序重组的中心轴, 也是变化的动因。是决定区域安保秩序结构性质的指标, 也是东亚秩序重组的标尺。特朗普上任初期, 美俄关系的核心是, △特朗普的领导能力与亲俄路线; △特朗普与普京的友好与亲密; △俄罗斯介入美大选的丑闻调查与改善关系的障碍物; △相互间又期待又不信任; △协力与纠纷共存; △美议会对俄的强硬政策及影响力的提高; △驱逐对方国家的外交官; △叙利亚内战与北韩核问题成为首要悬案。

普京政府针对北韩核问题的态度是, ①不允许北韩持有核; ②支持韩半岛非核化; ③反对军事措施、强调通过政治外交解决问题; ④无条件地重开六方会谈; ⑤谋求与北韩的睦邻友好关系的前提下, 引导北韩放弃核。最近普京政府放下一直以来的观望态度, 积极应对北核导弹问题, 表现出积极的态度。

今后为了克服复杂的韩半岛安保危机, 需要加强韩俄战略合作伙伴关系。首先不允许北韩搞核, 韩半岛必须非核化, 通过外交和平方法解决两国间核问题, 达成相关政策上的互助。而且, △提高和应用俄罗斯建设性的中介者作用; △完善符拉迪沃斯托克韩俄首脑会议的后续措施; △力求解除美俄关系与韩俄关系的联动性; △关注美中俄三角关系重组, 激活1.5轨机制战略沟通; △激活东北亚地区多方协助; △扩大韩俄间战略沟通频道, 努力激活对俄公共外交。

#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 and Security Crisis on Korean Peninsula

## 东亚周边国家与韩半岛安保危机

4

〈Lead Article〉 Changes i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Chinese Offensive and Retreat of the U.S.

〈卷首论文〉 东亚多方合作格局变化: 中国的攻势与美国的后退

YI Seong-Woo (Chair of Conflict Resolu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7

Security Crisis on Korean Peninsula and ROK-U.S. Ties:  
A Conside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韩半岛安保危机与韩美关系: 考虑韩半岛非核化政策

YI Seong-Woo (Chair of Conflict Resolu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23

Hegemonic Rivalry in Northeast Asia and Reflections on  
Korean Diplomacy toward China

东北亚霸权竞争与韩国对中外交反思

KIM Jin Ho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48

Reorganization of East Asian Order and Korea-Japan Relations  
东北亚秩序重组与韩日关系

SHIN Jung-wha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55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and ROK-Russian Relations:  
Towards Cooperation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trategic Cooperation

东亚·韩半岛安保政局与韩俄关系: 共同解决北核问题, 加强战略协作

SUH Dong Joo (Senior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